

여는 말

2015.12.10

한 해를 돌아보며,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프로젝트 그날들’이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이 저물어간다 하기에는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터지고 있어 아직 ‘그날들’을 되짚어볼 때가 아닌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침탈하고 내팽개치는 권력의 오만과 오기가 드셀수록, 인권이 걸어온 길을 잊지 않고 나아갈 길을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달여도 남지 않은 2015년을 돌아보려니 ‘시간 참 빠르구나’라는 상투적인 말을 먼저 건네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빨리 흘렀던 것 같기도 한 이 시간들이 너무 천천히 흘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나 겪었던 사건들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저장되고 의미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욱 소중한 하기도 합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벌써’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나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로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갔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애도하고 추모했던 마음은 ‘기억’하기 위한 ‘행동’으로 변화했습니다.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꼭 1년이 더해진 2015년 4월 16일, 국가는 공권력을 앞세운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유치장에 끌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아직도 어두워만 보입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또 한 번 국가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었던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고, 건물 옥상에는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인도로 원정 투쟁을 떠났고, 콜트콜텍 노동자가 곡기를 끊었습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고,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5성급 호텔’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동계약의 광풍은 모든 이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은 역사로

2015년, 인권의 그날들. 봄바람이 불다가 어느새 여름이 되었나 싶더니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또 무수히도 함께 싸우고, 말하고, 외쳤습니다. 광장으로 나온 혐오세력들이 떠들어댔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쿨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위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이 전국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는, 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날들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촘촘히 연결한 이 작은 책이 추운 겨울 손난로처럼 여러분의 손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사무실 책상 앞이나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친구의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인권의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곁을 지키며 언제나 손 잡아줄 수많은 이들의 얼굴도요. 인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목차

2015 프로젝트 <그날들>

- 8 분단 70년 빨갱이몰이 70년
- 10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10만 명의 꿈이 해산 당하던 날
- 12 코오롱정투위, 연대의 힘으로 마무리한 10년의 투쟁
- 14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오체투지 행진
- 16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은 응답하라
- 18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이들
- 20 쪽방을 없애는 또다른 방식
- 22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판결
- 24 KTX 여승무원들, 9년 기다림 물거품
- 26 기업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고용노동부
- 28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시동을 걸다
- 30 수미네, 공공 공간의 이름에 질문을 던지다
- 32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 34 제10회 살인기업 선정식
- 36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학교 성교육 표준안
- 38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권리가 있다
- 40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적인 만남
- 42 “명명” 짓어서 긴급체포 되다
- 44 한국인 원폭피해자 유엔에 서다
- 46 87년 헌법체제 부정 암흑의 날...
- 48 막무가내식 임금짜기, 임금피크제
- 50 임차상인들이 모여 법을 바꾼 날
- 52 전북판 도가니 사건, 대법원 앞에 서다
- 54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이라
- 56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고발하다
- 62 한국정부에게 국민의 건강권은 선택적 과제인가, 필수과제인가
- 64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
- 66 택배로 받은 대량살상무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 68 국정원의 경력법관 신원조사...사실상의 사상검증
- 70 삼성의 부당해고 노조탄압, 법원에서 심판 받다
- 72 노조파괴, 폭력의 민낯을 내밀다
- 74 인권침해의 온상, 공단에 문제제기가 시작되다
- 76 대법원, KT 퇴출 목적 차별적 인사고과 부당판결
- 78 혐오, 저항을 깨우다...제16회 쿨어문화축제
- 80 1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 82 알바노동자에게 10원짜리로 임금 지급한 ‘깍’질 사장
- 84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86 스타캐미칼 해복투 차광호, 408일 굴뚝의 삶을 끝내던 날
88 최저임금이라고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다
90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92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94 밀실인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의 부재
96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에 빨간 불이 켜지다
9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복적인 죽음을 멈추자
100 파업지지 발언하면 업무방해 방조죄?
102 (주)에버코스 사건, 산재은폐 현실을 드러내다
104 해군관사 농성천막 강제철거 이후 맞은 강경 투쟁 3000일
106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108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
110 페미니즘으로 귀여하게 만나다
112 적색신호를 향해, 그린라이트를 켜라!
114 학습시간 줄이기운동과 강제학습 반대운동
116 8월 30일, 도쿄에서 평화를 외치다
118 45일간의 단식...여전히 해고노동자들의 삶은 70미터 고공에
120 연민과 공포 사이, 갈 곳을 잃은 난민의 인권
122 약속도 인권도 헌신짝 취급하는 풀무원
124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9.12희망버스
126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 야합
128 종단 부당 개입, 총장은 퇴진하라...동국대 학생들의 투쟁
130 교사는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
132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포석 놓기
134 김무성 막말에 9년째 싸우는 기타노동자들 곡기를 끊다
136 여성가족부를 향한 분노의 외침, 여성성소수자 쫓기하다
138 사내하청 정규직화 싸움은 계속된다
140 차별진료 보라매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142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한 공문화 작업 이어져
144 평범한 시민을 음독하게 하는 한국전력
148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행동
150 형제복지원, 배제와 감금의 역사를 쓰자
152 김석기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
154 한국의 자유권 현실, 유엔에서 평가받다
156 25년만의 자유총선, 버마에 민주화의 씨앗이 뿌려지다
158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차별실태 조사 발표
160 11월 11~12일, 핵발전소에 맞선 영덕 민심의 승리

162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묻다
164 밤에는 학교와 학원의 불을 끄자
166 75명의 방진복 퍼포먼스
168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170 공익전문가의 탈을 쓰고 정부의 입장만 대변
172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수은중독으로 인한 산업재해
174 다시 닭을 튀긴 날
176 탈시설을 권리로 선언하다
178 불량학칙공모전
180 예술검열 반대와 문화민주주의를 지키는 문화예술인 만민공동회
182 선언하라 우리를...존엄과 안전에 관하 4.16인권선언
184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재앙...‘국민투표’로 확인한 96%의 민심
186 유엔에이즈, 한국의 낙인지표조사를 시작하다
188 강정의 지향은 마르지 않는다, 강경 바당처럼
190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 그리고 다시 시작
192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194 투쟁이 이어지고, 기억이 만나는 공간 ‘비정규노동자의 집’

2015 인권의 날들을 함께 모으는

프로젝트 그날들

2014.12.10.

2014년 11월~12월 전국 곳곳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희망정치연구소팀 황선 대표가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 등 중편과 보수일간지에서는 토크콘서트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은 '지상낙원' 발언들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일부 발언을 편집해 중복몰이를 시작했다.

언론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은 고등학생이 사제폭발물을 토크콘서트 장소에 투척하는 테러(2014.12.10.)까지 벌어졌고 경찰은 테러발생 직후 피해자인 황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역시 테러에 대한 언급은 없이 '중복콘서트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언론의 중복몰이에 힘을 더했다.

급기야 신은미 씨는 2015년 1월에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 출국, 5년 간 입국금지의 행정조치를 받아 추방당했고, 콘서트 진행자였던 황선 씨는 구속수감되었다. 기소내용을 보면 토크쇼는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십 수 년 전에 쓴 시와 7년 전부터 진행해온 방송의 일부, 투옥 중인 남편이 보내온 서신, 각종 행사 참석 등을 문제 삼아 구속을 위해 묶은 자료들까지 '창고대방출'을 했다는 비난을 샀다.

현재 신은미 씨는 미국에서 때때로 북한여행을 계속 하며 여행기를 올리고 있으나 고향인 한국 땅엔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황선 씨는 6월 말 보석 출소하여 1심 재판 중에 있다. 지난 11월 27일 검사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황선 씨에게 5년형을 구형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10만 명의 꿈이 해산 당하던 날

2014.12.19.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014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8대 1의 압도적 판결로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인용된 그 날, ‘통합진보당’이라는 단어도, 보라색 3선 모양의 깃발도, 심지어 지역구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가슴에 붙은 뱃지마저 헌법 밖으로 밀려났다. 10만 명의 당원이 품고 있던 다른 미래,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꿈이 해산당한 것은 물론이었다. 현대계동사옥 건너편에 모여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침묵을 지켰고, 안국역 주변에 모여 있던 군복차림의 수구단체 회원들은 환호를 질렀다. ‘중복적결!’ 승리의 함성이었다.

해산절차는 전광석화 같았다. 해산과 동시에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초법적인 의원직 박탈이 강행되었고, 당의 재산은 국고 환수되었다. 지도부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금지당했으며 당직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해산 당일, 그리고 얼마간 진보당 당원들은 거리에서 울분을 쏟아내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민사회가 일제히 해산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정권 하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부당하게 의원직을 잃은 5명의 국회의원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에 현재의 결정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유사정당 창당조차 금지되었다. 한국사회에 그 통합진보당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에 벌어진 정당해산 결정의 부당함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한, 진보당 당원이자 시민이었던 10만 명이 꾸었던 꿈은 언젠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복권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규탄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코오롱정투위, 연대의 힘으로 마무리 한 10년의 투쟁

2014.12.29.

2014년 12월 29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코오롱정투위) 노동자들의 10년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코오롱정투위는 2005년 2월 정리해고 이후 공장이 있는 구미와 코오롱 본사가 위치한 과천을 수시로 오가며 줄기차게 투쟁을 벌였다. 단식, 고공농성, 삼보일배, 점거농성 등 안 해 본 투쟁 없이 수년을 보냈다. 2012년 5월 ‘끝장투쟁’을 선포하며 시작한 과천 코오롱 본사 앞 천막농성마저 장기화되었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삶을 부여잡고 싸우는 동안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한 자본은 신나게 주머니를 채워왔다. 법과 제도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이지만, ‘정리해고자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고 절규하며 싸우는 코오롱 노동자들의 곁에는 다행히 함께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정리해고가 남의 일이 아님을, 해고노동자들의 싸움이 모두의 노동권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공감한 많은 이들이 코오롱스포츠 불매운동으로 전국의 산을 돌고 매장 앞 불매선전전에 함께 했다.

2014년 11월, 10년을 넘길 수 없다며 최후의 선택으로 단식투쟁을 시작한 노동자 최일배의 곁에는 함께 28일간 단식한 동지 박선봉이 있었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의면담으로, 거리선전전으로, 일인시위로, 릴레이단식으로, 기꺼이 함께한 과천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응원하며 물심양면 힘을 모아준 수많은 이들의 힘으로 코오롱정투위의 10년 투쟁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정리해고 기업 코오롱 아웃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오체투지 행진

2015.1.11.

2015년 1월 11일, 정부종합청사 앞은 칼바람이 불었다. 하얀 민복을 입은 이들은 땅위에 엎드려 있었고,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들을 지켜봤다. '2차 오체투지 행진' 다섯 번째 날 밤이다.

2014년 12월 26일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앞장서 '비정규법제도 전면폐기'를 외치며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제도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시작한 오체투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박한 이들이, 온 몸으로 새로운 길을 내자는 손내밈이었다. 더디더라도 수많은 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자는 기도를 담은 실천이었다.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자는 호소였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했던 행진이었다.

'비정규법제도 폐기'로 시작된 행진은 콜트콜텍과 쌍차 노동자들의 '정리하고·비정규법제도 폐기 오체투지 행진'으로 확대되었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스타케미칼 노동자들은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3차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행진을 '민란'이라 규정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하얀 민복은 땅바닥에 붙은 껌과 오물들로 뒤덮였고, 경찰의 폭력에 노동자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누군가는 이 행진방식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런 '평화적' 방식으로 무엇이 바뀌겠냐며 혼계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절박했고, 호소하고 싶었다. 다만 그것뿐이었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법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출처: 참세상)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엔 응답하라

2014년 10월 31일 수원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있었다. 삼성은 사과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규명과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 공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이다.

2015.1.21.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진상조사를 하려 했지만 삼성은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았다. 묵묵부답인 삼성에 맞서 수원지역 활동가들은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과하라는 퍼포먼스(1.21.)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원지역에서는 '지역사회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추진되어 2016년 초 제정을 앞두고 있다.

사건 1년이 지났다. 1만여 마리의 생명이 사라져간 하천은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은 모르쇠다. 삼성은 재발 자연이 주는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기를!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 규탄

소리 없이 죽어간 수많은 이들

2015.1.28.

2014년 12월 25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을 잃었다. 그는 결국 1월 28일 사망했다. 동료 및 장애인동 활동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유가족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투쟁을 이어갔다.

투쟁의 성과로 3월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드러났다. 의문사 외에도, 생활재활교사의 과도한 제압으로 생활인이 사망한 사건, 의문의 추락사고로 하반신 장애가 생긴 사건 등이 밝혀졌다.

2015년 12월 1일, 관할 감독 기관인 인천 응진군은 시설폐쇄라는 결단을 내렸다. 거주인의 인권을 우선시한 원칙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이후 거주인들에 대한 응진군의 책임 있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 이상 시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바라기 대책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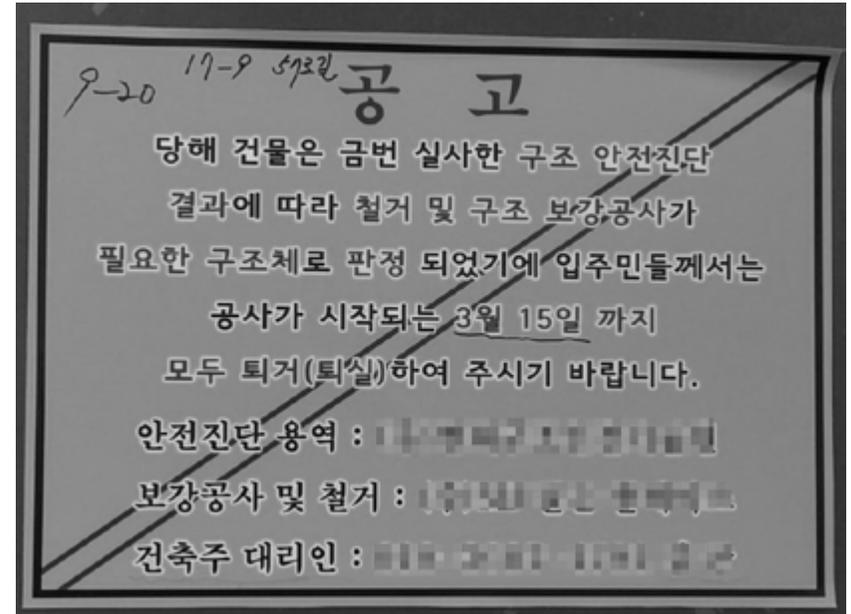
쪽방을 없애는 또 다른 방식

2015.2.4.

2월 4일, 서울역 맞은 편 9-20 쪽방 건물에 공고가 붙었다. 안전 진단 결과 위험하니 퇴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42가구나 되는 쪽방 주민 누구도 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또한 한 달 후 진행된 구청의 안전진단 역시 균열, 누수에 대한 보강이면 족하다 판단하였다. 결국, 안전진단은 쪽방을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건물주의 선택된 명분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불안했고, 억울했다. 벽체가 부식되고 비가 새도 얼굴 한 번 볼 일 없던 집주인이 단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을 통째로 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억울했다. 몇몇은 떠났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규찰을 서고 구청, 시청, 국회, 법원 등지를 돌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사이 건물주는 대문과 화장실 문짝을 떼고, 빈방을 철거하고 수도를 끊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머무는 것, 자기 방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무기로 싸웠다.

그렇게 한 겨울 시작된 싸움이 다시 겨울을 예비하던 지난 10월 말, 9-20번지는 다시 쪽방으로 돌아왔다. 서울시와 건물주의 합의에 따라 4년 간 쪽방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작은 승리이고 4년이면 도래할 불안을 내포한 승리다. 그러나 쪽방살이가 잉태한 주거권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소중하다. 한편, 도심 한 복판의 섬과 같은 쪽방이 향후 어떻게 공격받을 것인가를 예상케 한다는 점에서도 기억되어야 할 사건이다.



2015.2.13.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2015년 2월 13일,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진정을 낸 것에 대해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존재가 형식적일 뿐이기에 ‘위장도급’이라는 것이다. 불법파견과 다르게 ‘위장도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기에 중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당연히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만 한다.

위장도급 판정이 나오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판정을 미루는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태백지청 점거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 사이 회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었고,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어용노조는 대표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가져가기도 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얻은 판정이었기에 희망은 컸다.

그러나 2월 17일, 원청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통보한 ‘직접고용’에 맞서 하청업체와 체결한 도급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 불법의 피해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역으로 거리로 나왔게 된 것이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복직하지 못했고, 투쟁하던 노동자 중 두 명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 회사는 김앤장을 동원했고, 조합원들 가족에게까지 압박을 넣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저들에게는 법도, 주먹도 가깝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 (출처: 참세상)

KTX 여성무원들, 9년 기다림 물거품

2015.2.26.

정부와 철도청은 2004년 4월1일 KTX를 개통하면서 여성무원 전원을 외주·위탁하였고, 이 문제는 2006년 홍익희 경영진의 여성무원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와 임금·노동조건 차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폭발했다. 여성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코레일은 2006년 5월 여성무원 28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그렇게 시작된 KTX 여성무원 투쟁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조차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의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정성의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종을 울리며 3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여성무원들은 2008년 9월 서울역 철탑농성을 끝으로 물리적 투쟁을 끝내고 2008년 11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X 여성무원들이 철도공사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도 마찬가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2심 재판이 열린 지 4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정의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하급심판결을 뒤집고 “KTX 여성무원을 코레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성질상 도급이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그것만으로는 위장도급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후 3월 16일 새벽 충남 아산의 아파트에서 서른다섯 살 해고된 KTX 여성무원은 판결 이후 돈 걱정을 하다가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무원들의 패소판결을 선고(11.27.)하였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내지 묵시적 근로관계로 인정되어야 할 사건을 합법도급으로 판단하여, 노동인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대법원 판결 규탄하는 KTX 승무원 (출처: 매일노동뉴스)

기업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고용노동부

2015.3.13.

3월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복수노동조합도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단체협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결과발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참여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배치전환·징계시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과도한 제한규정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나타난 인사·경영권 제한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운영이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사용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기업의 인사경영권이라는 것 역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기업경영참여는 범위만도 아닐뿐더러 기업경영의 실질적 민주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려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경영의 신속한 의사결정,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의 기업 의사결정 개입이 마치 기업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제는 2014년 고용노동부의 확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단체협약 실태조사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14.11

고용노동부
Ministry of Labor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시동을 걸다

2015.3.18.

영화 ‘카트’, 드라마 ‘미생’, 웹툰 ‘송곳’ 등 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했다. ‘노동’이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9일,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수언론은 이를 ‘장그래법’이라 불렀으나 그 실체는 ‘임금 깎고,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늘리는’ 정책이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기간연장 해달라고 했냐’며 들끓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구성되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9월 13일 노사정 야합 이후에는 비상시국농성에 들어갔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음을 모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노동‘만’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비정규직’을 전체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비정규직종합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이름을 바꾼 채 현재도 진행 중이다.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야 말겠다는 저들의 질주는 여전히 매섭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수미네, 공공 공간의 이름에 질문을 던지다

2015.3.24.

지난 2012년 6월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에 시립미술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미술관 명칭에 자사의 특정아파트 이름을 넣자는 제안을, 수원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 바로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다. 시립 미술관의 명칭에 기업명의 특정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이하 수미네)를 꾸렸다(3.24).

수미네는 시립미술관 명칭이 확정된 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공공미술관의 명칭은 공공미술관답게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수원의 문화, 역사적 상징 공간인 화성 앞에 들어서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계속 현대산업개발의 눈치를 살피며 원래 명칭을 고수했다.

이에 수미네는 기자회견, 수원시 및 수원시의회와의 면담,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 1인 시위, 반대 서명뿐만 아니라 행궁앞 도시락 파티, 히어로들의 일인시위, 판다 퍼포먼스, 100시간 무한도전, 미술관 시민개관식 등 재기발랄한 방식으로 명칭 변경 운동을 펼쳐나갔다. 때로는 심각한 얼굴로 서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깔깔대고, 흥에 겨워하고, 즐거움과 재미를 나눴다.

그깟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공공기관과 대학교, 각종 공간들에 기업이름을 딴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고, 자본의 이름으로 공간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무감각했다. 그리고 어느덧 그러한 건물 이름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발 딛는 대부분의 땅이 부자들의 것임을 자각하며 살게 되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자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까지 '이름'이 중요하다고 수미네는 주장한다.

결국 지난 10월 8일 미술관은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해서 만든 이름으로 개관했다. 공공 공간의 명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자본의 논리가 공공의 공간 마구잡이로 침투하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용인해야 하는 것인지,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공공의 권리마저 사도록 내버려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유의미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기에 이 운동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 없는 운동이기도 했다. 현재 수미네는 시즌 1활동을 마무리하고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2에서도 공공성을 침투하려는 자본에 지속적으로 뼈뺌한 시선을 보내며 유쾌하고 발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2015.4.2.

2014년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1.7.)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예산과 직제 논란 속에 출범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2015년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3.27.)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숙농성을 하며 반대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는커녕 보상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4.1.)했고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받아 적었다.

다음날인 4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수십 명이 삭발을 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데 보상금을 내세우며 유족들을 능욕하는 정부를 향한 분노가 온 세상에 사무치는 날이었다. 이어 유족들은 안산에서 서울로 도보 행진(4.4~5.)을 시작했다.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을 들고 걷고 또 걸었다. 정부가 유족들을 어떻게 모욕하든, 세상이 유족들을 어떻게 쳐다보든, 죽은 이와 약속을 기억하며, 끝낼 수 없는 사랑을 다짐하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행진에 나섰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삭발뿐"이라고 유족들은 울먹였지만 그/녀들은 어떤 모욕도 밀어낼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깨우쳤다.

유족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5.6.)했다. 그 후로도 예산 축소 시도가 이어지는 등 진실을 덮으려는 힘은 멈추지 않았다. 최근에는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에게 청와대 조사를 막으라는 등 진상조사 방해로 지시하는 해양수산부 문건(11.19.)이 발각되기도 했다. 노골적인 은폐 시도다. 진상 조사를 시늬만 내다가 종결해버리고 보상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는 수많은 참사가 반복되어 온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유족들은 진실을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별조사위 전원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첫 조사 신청(9.14.)을 시작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정부의 집요함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족과 시민들의 연대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의 편이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제10회 살인기업 선정식

한국은 누구나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나라다. 일터의 위험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도 위협한다.

10년 전, 일터에서 벌어지는 죽음은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사회적으로 밝히는 시상식이 열렸다. 그 시상식이 올해로 10주년이었고, 10년 누적 50대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1,2,3위에는 나란히 현대건설, 대우건설, GS 건설이 올랐다. 아파트 공화국에 숨겨진 모습이다. 그와 함께 살인기업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온라인 투표 1위는 청해진해운과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2015.4.13.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학교 성교육 표준안

2015.4.13.

성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문제가 많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말 것을 명시하는 등 차별적이고, 금욕을 강조하라는 등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4월 13일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학교 성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성소수자 차별적 성교육 지침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권리가 있다

2015.4.18.

4월 16일, 세월호에 선장이 없던 1년 전 그날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해외 순방이라며 나라를 비웠다. 책임을 버리는 일은 이다지도 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팽목항을 둘러 세월호 인양을 약속하기는 했다. 그러나 누가 그 약속을 걱정 없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작년부터 인양 방법을 검토해왔는데도 결정은 늦어졌고, 그러는 동안 정부여당 인사들은 돈 많이 드는 인양을 왜 하나며 반대 여론을 몰아왔다.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면 발표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했다. 그저 당시 쟁점이 되던 시행령 폐기 요구를 입막음하려던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도 그것이다.

4월 16일, 가족과 시민들은 온 마음을 다해 1주기의 추모를 준비했다.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손에는 국화꽃 한 송이씩이 들려있었다. 광화문세월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 헌화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나온 행렬은 차벽에 가로막혔다. 항의에도 꿈쩍 않는 차벽을 돌아 시민들은 삼삼오오 광화문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섰다. 광화문 사거리를 막은 경찰을 피해 돌다가 유족들 일부가 광화문 현판이 있는 경복궁 앞에 당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추모와 애도조차 가로막는 정부에 대한 항의였다. 4월 18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누구도 추모와 애도를 가로막을 수는 없으며, 우리는 더욱더 충분히 애도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애도는 외판 방에서 혼자 우는 것이 아니다. 슬픔을 나누고 문제를 찾으며 해결을 모색하고 함께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실천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은 모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 18일 밤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결국 만났다. 그러나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액을 비롯한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 했으며, 집회가 끝난 후 줄줄이 소환이 이어졌다.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시민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모여서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배제하려 들고 있다.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한다.



세월호 1주기 집회 (출처: 허핑턴포스트)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적인 만남

2015.4.25.

매년 4월이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3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난 청소년 동성애자 욱우당을 기억한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추모는 오늘을 사는 이들의 실천과 연대로 확장돼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드러내는 캠페인, 혐오와 차별에 맞선 행동으로 이어졌다.

2015년에는 혐오와 차별에 맞선 연대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성소수자와 장애인, 홀리스들이 만난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욱우당 12주기 추모행동의 일환으로 4월 25일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함께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이상한 연대문화제'를 열었다.

차별받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유독 가까이 있다. 그것도 지독히 서러운 모습으로. 광화문 농성이 1000일을 보내는 동안 농성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영정 사진이 11개로 늘어났고, 성소수자들은 죽음 뒤에도 자신의 삶과 이름조차 온전히 기억되지 못한다.

이상한 연대문화제는 차별과 혐오가 낳는 절망의 무게를 이겨내는 힘이 저항과 연대에 있음을 보여줬다.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는 이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삶과 한과 꿈을 이야기로, 노래로, 춤으로 풀어냈다. 이상이 일상이라는 진실이 정상의 폭력을 깨는 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억할 그날이 또 한 페이지 늘어났다. 성소수자, 장애인, 홀리스의 만남은 어색하고, 이상하고, 유쾌하고, 아름다웠다.



고 욱우당 12주기 추모기도회

"멍멍" 짖어서 긴급체포 되다

2015.4.3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동글이' 박성수 씨가 4월 30일 구속됐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혐의다.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7개월 넘도록 감옥에 갇혀있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수사도 이례적이지만, 최장 6개월인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연기한 것 역시 흔치 않은 일이다.

박성수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전단지 문구만 문제 삼을 뿐이었다.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성수 씨는 “개꼬리 흔들기 식 공무집행을 중단하라” 외치며 개사료를 뿌렸다. 박근혜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으며 전단지를 출판물로 둔갑시켜 빨간 딱지를 붙이려는 시도에 조롱으로 응수한 것이다. 전단지를 명예훼손으로 조사하는 일에 이보다 더 ‘진지하게’ 대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과잉단속에 항의하며 ‘멍멍’ 외쳤던 박성수 씨는 기자회견 도중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었다. 국가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지금 표현의 자유는 한 사람의 죄목이다.



대구에서 전단지 배포로 조사 받는 중인 변홍철씨와 함께 공안수사 항의 피켓팅 (출처: 오마이뉴스)

2015.5.2.

올해는 광복 70년이다. 또한 역사상 최초로 인류에게 핵폭탄을 사용한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피폭자들에는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군에 끌려온 수만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었다. 해방 이후 피폭된 몸을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무관심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어떤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중의 차별을 받아 왔던 한국인 피폭자들이 처음으로 유엔 무대에 섰다.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가 한창이었다. 핵무기를 감축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자는 약속을 국제사회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서로 점검하고 평화 의제를 다루는 자리에 한국인 피폭자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과 원폭2세환우회 김봉대 고문이 NPT에 참가했다. 특히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한국인 피폭자를 대표해 유엔 연단에 올라 각국 정부와 전 세계 평화 활동가들에게 한국인 피폭자들의 문제와 원폭 2세들이 겪는 고통을 전하며 일본과 미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원폭 피해의 유전을 인정할 것과 실패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을 빼앗기고도 이중으로 소외되었던 한국인 피폭자들의 아픔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기억해야 할 올해의 그날이 아닐까.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 참여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출처:뉴스민)

87년 헌법체제 부정 암흑의 날...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 의안 가결

2015.5.6.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박상옥은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의 수사검사다. 1월 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부실한 검증과 자격논란으로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막내검사'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해 "물고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며 빠져나가려 들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결국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여 야당이 불참한 채 100일 만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박종철 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의 결과로 87년 개헌 당시 대법원장 권한결재를 위한 국회 동의절차가 도입되었지만 무력화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 경위 해명과 제청철회 요구는 묵살한 반면 국회에 친서를 보내 임명동의안 통과를 압박하는 등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결국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뜻에 따랐던 정치검사가 여당의 비호 아래 대법관이 되는 반민주적인 선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후 후임 대법관 추천에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개추천을 받았지만, 동일한 인사들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관 내부인사만으로 추천하게 하여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법관순혈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반대 기자회견

막무가내식 임금깎기, 임금피크제

2015.5.7.

5월 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획재정부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고령자의 정년 연장 등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총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협박까지 동원하여,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되었고, 마구잡이 임금깎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정년이 연장되면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55세가 되면 무조건 임금이 하락하는 방식이 일반화됐고 그 삭감액은 30~5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150% 이상이 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위기에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약간의 임금이 올랐을 뿐인데, 그마저 다시 빼앗기게 된 것이다.

정년연장이나 청년일자리 등의 이유는 듣기 좋은 명분일 뿐, 임금피크제는 결국 모든 노동자에 대한 임금깎기가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반대 (출처: 오마이뉴스)

임차상인들이 모여 법을 바꾼 날

2015.5.13.

그동안 우리가 목도한 인권의 역사는, ‘존재’했지만 ‘부정’당해왔던 권리의 외침들이었다. 세상은 직접 목소리 내며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 변화해왔다. 임차상인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다.

임차상인들이 모였다. 장사를 뒤로 하고, 세상을 바꿔서 마음 편하게 장사하기 위해 거리로, 국회로 나갔다. 평생 법을 어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잘못된 상가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바꾸기 위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무 말 못하고 가게에서 쫓겨났던 수십 년의 세월이었다. 법원과 임대인에게 호소해도 “법이 그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을 들으며 눈물지어야 했던 세월이었다. 임차상인들은 건물을 소유했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외쳤다. 돈보다 사람의 삶이 먼저이고,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다는 임차상인의 권리를 주장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상인의 영업가치는 함부로 약탈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서야 법이 이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출처: 민중의 소리)

전북판 도가니 사건, 대법원 앞에서

5월 14일,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마지막 재판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 및 보호작업장의 전·현직 원장 2명이 장애인여성 수 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가해자 2인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2015.5.14.

판결 이후,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전라북도에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11월 17일, 전라북도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설 내 장애인권의 길은 멀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와 시설 내의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과 동시에 과제를 남겼다.



자림복지재단 규탄 기자회견 (출처: 참소리)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이라

2015.5.16.

2015년 5월 16일 아이다호데이(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를 맞아 전국의 무지개가 모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전주, 대구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 희망을 담은 무지개버스들이 서울역광장으로 모였다. 우리는 그 무지개가 우리 사회의 희망임을 확인했다. 다양성과 인권의 광장이 열리는 순간에 모인 무지개들이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임을 확인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단지 성소수자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이며, 노동, 여성, 빈곤, 평화, 이주, 장애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과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그 결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고, 이를 방관하고 모르쇠 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에게는 성소수자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요구였다. 또한 이를 위한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이 후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더 이상 혐오가 인권이란 이름을 함부로 써가며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내년 아이다호데이 때 다시 만나, 인간의 존엄을 위해 각각의 현장에서 함께 싸운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 좋겠다. “혐오를 멈춰라. 광장을 열이라!”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고발하다

2015.5.19.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교육의 발전을 소개하며 홍보하는 섹션 등을 열었다.

자화자찬하기에만 급급할 뿐 진짜 한국교육의 모습을 숨기는 정부에 분노한 청소년·교사·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한국 정부가 말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13가지 문제'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시교육 중단과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하는 교육과정, 학습시간 경쟁 규제 △특권학교 폐지, 무상교육, 교육격차 해소 △대학평가 중단과 대학 구조조정 중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 존중 △실질적인 학생회 활동을 통한 학생자치, 표현의 자유 보장 △장애·이주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 △성평등 교육 실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교육재정 확충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 노동권 보장 △학교 비정규직 철폐 △교육다양성 존중 학교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보장.

진짜 한국 교육의 문제들과 이를 바꾸기 위한 요구들을 밝히면서 포럼이 열리는 기간 동안 거리 전시회를 함께 열었다. 한국 교육의 진짜 현실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포럼 안에서는 한국 시민단체 참가자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교육포럼 정부가 말하지 않는 한국의 13가지 교육문제 (출처: 레디앙)

한국정부에게 국민의 건강권은 선택적 과제인가, 필수과제인가

2015.5.20.

‘메르스’라는 질병은 오뉴월의 찬 서리처럼 닥쳐와 국가적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 선포되었다. 37명이 사망하고 16,693명이 격리되는 등 피해는 전방위적이었다. 그러나 메르스의 피해규모 및 공포와 불안은 질병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었다. 5월 20일 첫 환자 확진 이후 마지막 메르스 확진자 한 명이 사망한 11월 25일까지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는 일관됐다.

문제는 안일한 정부 대처만이 아니었다. 정부는 입원실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던 취약계층 환자들을 강제퇴원시켰다. 메르스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취약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주었고,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역량이 없음을 확인하게 했다.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태도는 ‘과연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남겼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가 협상이나 합의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절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6월 1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 등 정부의 특별대책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출처: 민중의소리)



메르스 최초 환자 확진 후 16일이 지난 6월 6일에서야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프로젝트 그날 리얼

메르스와 인권

인권의 자리에서 더하고 싶은 이야기

☞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쪽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아 는 상식선에서 대답을 했지만 문제는 정작 이를 제대로 알려줄 메르스 콜센터에는 외국어 가 능 상담원이 한 명도 없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 하기 바빴다. 이게 비단 메르스 사태뿐일까? 이 나라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과연 몇 순위 에 있을까? 아니 그 순위에 존재하기라도 하는지 의문이다.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이 고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이 사 회에 소외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점점 커져 가는 지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피해자인 감염인들에 대해 ‘몇 호’라는 방식으로 이름붙이는 것, ‘슈퍼 전파자’, ‘거리를 활보’ 등으로 언론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발 언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어요. 감염인의 인권에 대해 충분히 제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 니다. 병원의 청소노동자의 경우, 제대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덕분에 일부 다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모두의 안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피해를 겪게 된 감염인의 시선에서 더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 쇼 핑이라는 환자들의 행태에 비난이 집중되었는데, 진료체계 등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았던 것 도 아쉬웠습니다.

☞ 4.16연대는 “숨기기에만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야말로 메르스 국가재난위기를 야기 한 근본원인이다.”라는 주장을 담아 6월 16일 ‘메르스 사태에 관한 전국 공동성명’을 발표 했어요. 총 86개 단체와 578명의 개인이 함께 했습니다.

☞ 최근 메르스 감염 마지막 환자가 사망을 하자 정부와 언론은 메르스가 종식되었다고 표현 했지요. 마지막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시간들은 사라지고 마치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보니 다시 한 번 당시 감염인들을 대했던 사회분위기가 떠올랐어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격리 통제되어야만 하는 감염인들에 대해 인권은 무엇을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 메르스 사태 이후, 국립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취약계층 환자들이 대책 없이 쫓겨났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바이러스마저도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냈다.

☞ 인권감수성의 부족이 질병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서로를 상처내고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정작 국가의 개입은 개인을 감시하는 데만 그쳤을 뿐이다.

☞ 메르스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홍리스 중 환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홍리스 환자가 생기는 순간 거리홍리스들의 잠자리는 강그리 사라지고, 마치 메르스의 숙주인 양 잡도리 당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히 밀집된 생활환경 탓에 홍리스 중 한 명만 발병해도 집단 전염이 불 보듯 뻔한데도 복지부, 서울시 그 어디도 홍리스들에게 마스크 하나 주지 않았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급을 촉구하고, 없는 재정을 털어 급한 대로 마스크를 몇 백 장 사서 배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중가수 박준 형님도 약국 하는 친구한테 부탁해 받아왔다며 마스크 박스를 보내오셨다. 돌이켜봐도 메르스 유행 시기는 참 아찔했던 순간이다.

☞ 복지부는 6월 6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존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숙인 의료지원을 받는 홍리스들은 지정병원인 공공병원만 갈 수 있기에, 이것도 뭔가 사단이 나겠다 싶었다. 홍리스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7층 병동에 들렀다. 이미 병실이 거의 비어진 상태였다. 남아 있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 병원에서 내일까지 나가라고 했다 한다. 애초 예정된 퇴원 기일은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병원에서는 타 병원을 연계시켜주지 않은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음날 성치 않은 몸으로 서울역에 나와야 했다. 복지부 대응의 문제야 두말할 나위 없으나 당시 사태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국가적 질병,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있어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에 평상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다. 아마,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 생각했던 이들에게도 잠시 생각할 계기는 되었을 것이다.

☞ 메르스가 한창이던 때 홍리스와 감염인 등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던 병원에서도차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났다. 메르스는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위치,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메르스는 알권리 침해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태이다.

2015 인권의 날들을 함께 모으는

프로젝트
그날들
리뷰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

2015.5.20.

메르스의 혼란 속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친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는 연초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직원 성과급제 등을 내세웠다. 이는 공공병원을 수익성만 추구하는 돈벌이 병원으로 개조하는 제도이다. 이에 맞서 4월 23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4일, 중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 ‘제주국제녹지병원’ 설립 신청허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가 철회(5.20.)했다. 그러나 설립 승인을 재요청(6.15.)하며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주국제녹지병원’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즉 한국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영리병원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 민영화의 물꼬가 되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식약청은 물리·화학적 검사만 통과한 신의료기기를 환자의 몸에 먼저 사용하며 1년 후에 서야 임상적 평가를 시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에는 병원의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마저 통과되었다. 이제, 의료기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마루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고가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제대로 된 안정성 검증 없이 환자의 몸에 비급여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것이다.

12월 3일,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초석 역할을 한다. 의료민영화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과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를 이윤 추구의 용도로 이용한다. 그러나 의료는 민중의 것이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우자!



영리병원 설립 신청 철회하라 기자회견 (출처: 제주도민일보)

택배로 받은 대량살상무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2015.5.27.

택배를 기다리는 건 즐거운 기억이 많았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택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5월 27일, 미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평택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민간업체 페덱스를 통해 보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평택 주민을 비롯한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탄저균 반입은 단순한 '배달 사고'가 아니다.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로, 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해 꾸려진 한·미 합동실무단은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훈련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이러한 실험은 대한민국 국민 방어와 한미 동맹군 보호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잘 모르지만, 좋은 거니까 봐줍시다' 하는 식이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성역 앞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무력화되고, '한·미 동맹은 언제나 옳다'라는 명제가 신앙처럼 강요되면 법도, 절차도, 알 권리도, 시민의 안전도 모두 설 자리를 잃는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모른 채 당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이 아니라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탄저균 반입 규탄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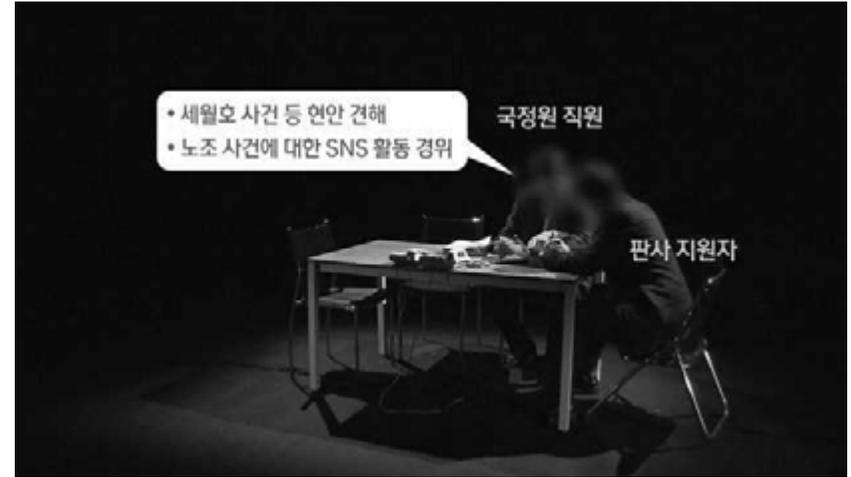
국정원의 경력법관 신원조사... 사실상의 사상검증

2015.6.1.

을 상반기에는 국가정보원의 경력법관 임용 시 신원 조사가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현재 공무원 임용절차에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경력판사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곁했다. 또한 그러한 면접 결과가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암시했다.

2015년 6월 1일, 2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경력법관 임용예정자도 아닌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을 불법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1) 사실상의 사상검증, (2) 내면의 양심을 밝히도록 하는 강요, (3) 삼권분립 위배,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공안통치 방식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장과 국정원장의 사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폐기를 주장하며 가칭 ‘보안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호한 규정을 명시적·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일정 정도 개선안을 마련하긴 했으나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국정원의 법관 신원조사는 여전히 문제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의 사상검증으로 비판받는 신원조사의 법률적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을 폐기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출처: SBS뉴스

삼성의 부당해고 노조탄압, 법원에서 심판 받다

2015.6.12.

2015년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소속 노동자 조장희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장희 씨는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18일 해고된 바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제외하고, 2014년 1월 22일과 2015년 6월 12일,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연이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삼성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지금껏 삼성의 노동탄압 부당해고로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조장희 씨가 처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의 탄압으로 인해 소송을 중도 포기하였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부당해고 소송을 다룬 것 자체가 소중한 성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문건 'S그룹 노사전략'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법원도 삼성의 조직적인 무노조 정책 및 노동조합 탄압을 인정한 것이다.

2011년 7월 조장희 씨를 해고할 당시 해고 사유였던 '배임' 혐의 역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2011년 9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내 기숙사에서 유인물을 돌리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무죄로 판명되었다. 한편,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2015년 11월 13일 '삼바(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대회를 열었다. 삼성의 지배를 거부하며 삼성에 맞서 싸워온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과 함께 '삼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삼바 대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삼성 부당해고 판결 인정 촉구 피켓팅

노조파괴, 폭력의 민낯을 내밀다

2015.6.17.

갑을오토텍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다. 2014년,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특전사·전직경찰 출신의 전문 용역을 신규사원으로 채용했다. 사측이 채용한 신규사원들은 기업 노조를 설립하였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지속적인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6월 17일, 26명의 갑을오토텍 조합원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력사태 이후 갑을오토텍 조합원들은 노조파괴용병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0년부터 이어져오는 노조파괴의 흐름은 2015년 신종노조파괴로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 전문용역을 고용하여 폭력을 행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직 특전사와 경찰을 신규채용한 새로운 방식의 노조파괴 전략이 등장한 것이다. 갈수록 노조파괴는 교묘해지고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는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표면상 ‘노노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종 노조파괴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단결할 권리가 절실하다.



신종 노조파괴 현장 갑을오토텍 (출처: 미디어충청)

인권침해의 온상, 공단에 문제제기가 시작되다

2015.6.17.

올해 민주노총은 8개 산업단지(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전국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했고 6월 17일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을 토론했는 자리를 열었다. 공단은 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대다수가 재하청 업체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공단 업체 중 90%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 공단노동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준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34.8%에 달하고, '무료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36.1%로 확인됐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단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이다. 공단노동자의 40.6%가 폭언이나 폭행, 감시와 왕따,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 해고 수단으로 인권침해를 활용한다. 노동자에게 모욕을 주어 쫓아내는 것이다. 만성적인 고용 불안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기도 한다.

중소영세사업장 위주의 공단노동자들의 실태는 그동안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문제제기는 더욱 거세게 불거질 것이다.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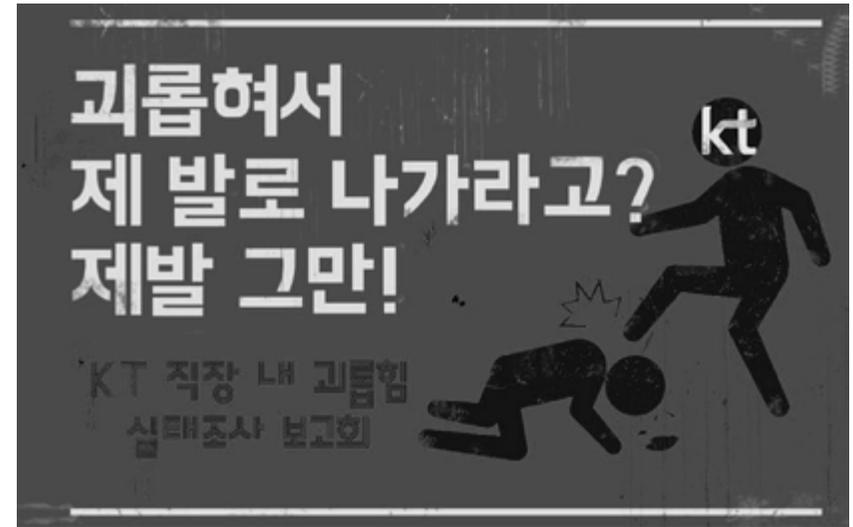
반월시화공단 인근 안산역에서 진행 중인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법원,
KT 퇴출 목적
차별적 인사고과
부당 판결**

2015.6.24.

(주)KT는 2002년 민영화 때부터 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리해고 및 노동조합 탄압을 강화했다. 2004년 9월, (주)KT는 “매년 총원 2% 수준의 부진인력을 직무 재배치·전직 지원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킨다”는 내용의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KT민주동지회 회원과 114 상담원 외주화 시 전출 거부자 등 1천 2명이 ‘부진인력(C-Player)’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부진인력 대상자들은 낮은 인사고과를 받으며 퇴직을 종용받았다. 실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가동되었던 2009년까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01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24일, 대법원은 (주)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사고과와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했다. 이는 재량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원, 분사 거부자 등을 부진인력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집단적 차별사건’이라 규정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다.



혐오, 저항을 깨우다... 제16회 퀴어문화축제

2015.6.28.

‘제16회 퀴어문화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행사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았다. 2015년 6월 9일 개막식 및 6월 28일 퀴어 퍼레이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상징적 저항공간인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단체가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년 간 그토록 원했지만 밟지 못했던 서울광장을 두 번이나 밟았다. 여기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뜻밖에도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이다. 그들은 연초부터 축제 개최를 막기 위해 허위집회 신고와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에 주최 측은 당초 개최예정지였던 대학로 대신 서울광장을 찾아 개막식과 퍼레이드를 신고하게 되었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혐오세력은 집회신고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경찰 또한 이들에 편승하여 ‘출서기 집회신고’라는 사상 초유의 방식을 공지했다. 분노한 성소수자와 연대 시민들은 남대문사에서 8일간의 노숙 밤샘 출서기에 나섰으나 결국 경찰은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 ‘집회 행진 장소가 경합된다’며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퀴어들의 용기와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퍼레이드에는 사상 최고 인원인 3만 명이 참가했다. 보수 기독교 혐오세력의 광적인 시위와 반대가 오히려 더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총 112개의 인권·시민사회·종교·정당 단체로 이루어진 ‘퀴어문화축제 대응협의체’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연대하며 힘을 보탤었다. ‘제 16회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인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 레볼루션’처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저항을 일깨워 레볼루션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퀴어레볼루션! 16회 퀴어문화축제

1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2015.6.30.

2015년 6월 3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198명 전원에게 7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했다. 완성차 생산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어서 사측은 7월 5일 사내하청 신규채용을 한다는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해고예고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존에 다니던 사내하청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신규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기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최근의 해고예고 통보 이전에도 2014년 4월과 2015년 5월, 각각 360명과 500명이 해고된 바 있다. 이 때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이 한 달 뒤 다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사측은 유럽 자동차 판매를 포기하면서 2교대제 근무에서 1교대제로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00여명의 여유 인원이 생겼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리하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이 해고된 공정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사실상 '고용 불안'일 뿐인 '고용 보장'이라는 노사합의에 이른 것이다.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답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능력 부족의 책임을,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왜 이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앞 선전전

**알바노동자에게
10원짜리로
임금 지급한
'갑'질 시장**

2015.6.30.

2015년 2월, 울산의 모 주점에서 일했던 한 알바노동자는 밀린 임금 중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지급받았다. 사장은 알바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언어폭력을 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매장에 찾아간 알바 노동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이 상황을 접수받고, 해당 가게 앞에서 사장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6.30.)을 진행했다. 인터넷과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떠들썩했다. 가게 사장은 알바노동자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 본다.

비록 사장 개인이 알바노동자의 권리에 얼마나 예민해졌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이 사건 이후 나름의 법적 변화도 이뤄졌다.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알바노조는 알바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을 늘 주시하며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알바노동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근로기준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상식이 될, 그 날을 기대한다.



7월 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국가정보기관의 사찰 의혹이 뜨거운 모래 폭풍처럼 여름을 휩쓸었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회나 법원 그 어느 곳도 알지 못한 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마트폰 해킹 기술을 수입했으며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국회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뚜렷한 피해자가 없다는 허울뿐인 말을 남기며 해당 수사에 미진한 모습이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활동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 앞에 활동 비밀을 보장받는 것부터가 예외적이다.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면 정보기관은 폭주할 수밖에 없다. 자기 이해에만 복무하는 정보기관에게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리자조차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짙은 그림자가 남아 있다. 나도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정보기관은 한국 현대사부터 지난 대선까지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를 유린해왔다. 최근에는 ‘테러방지’를 이유로 자기 관의 권한과 감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앞에, 법원과 국회 앞에 감잠인 정보기관은 테러만큼 위험하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이다.



스타케미칼 해복투 차광호, 408일 굴뚝의 삶을 끝내던 날

2015.7.8.

한국합섬 제2공장이었던 그곳, 2011년 여름. 스타케미칼이 공장을 인수하기 전까지 텅 빈 공장을 지키며 5년 간 투쟁한 끝에 복직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복직한 지 2년이 안 되어 청산을 선언한 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은 해복투(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와 어용노조로 나뉘었다. 청춘의 피땀으로 일궈낸 공장을 5년의 폐업 투쟁 끝에 되찾았지만, 이를 다시 집어삼키려는 먹튀자본과의 싸움으로 내몰렸다. 노동자들은 그에 맞서 또다시 2년을 싸웠다.

2014년 5월 27일 새벽 경북 칠곡의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에 한 노동자가 올랐다. 꿈쩍도 않는 자본과의 극한투쟁은 유례없는 최장기 고공농성이 되었다.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남을, 45미터 굴뚝에서의 408일 간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되던 날. 굴뚝사람이 되었던 노동자 차광호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경찰의 방해로 예정보다 5시간이 지나서야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유치장에 가뒀다. 지정병원의 형식적인 건강검진을 진행한 뒤였다. 기업의 무수한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을 앞세워 수수방관하는 경찰이, 심신의 절대 안정이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득달같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다행히 차광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풀려났다. 그러나 스타케미칼해복투의 투쟁은 자신의 일터와 삶을 지키기 위해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자신의 일터와 삶만이 아니다. 권리와 존엄을 지키며 살기 위해 자본과도 공권력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땅의 노동자의 현실이다. 이는 끝내 인간으로 살고자 싸우는 이들의 투쟁으로 조금씩 전진할 것이다.



408일 굴뚝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차광호 스타케미칼 노동자 (출처: 뉴스민)

최저임금이라고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다

2015.7.8.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7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6만 270원이다.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주변을 돌아보며 자기 삶을 챙기기에는, 너무도 빠듯한 임금이다.

시급 6,030원이라는 액수보다 더 화나는 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도 그 돈을 받는 사람에게 희망 금액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년 그랬다. 이번 결정 역시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 위원 9명을 뺀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올해는 청년을 대표해 청년유니온 위원장,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홈플러스 노동자가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로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 내용이 제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27명만의 밀실논의 하듯이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저임금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려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다.

임금협상이라면 최소한 주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만나야 한다. 얼마를 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협상해야 한다. 임금은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다. 단지 당사자 몇 명이 대표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내 그 힘으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2015.7.15.

인권활동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4.16인권선언 제정운동과 함께 세월호참사 인권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의 목표는 참사와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권리,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를 밝히고, 특별조사위 지원소위 피해자 전수조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실태조사는 피해자를 집단별로 분류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조사의 범위는 희생학생 가족, 교사 가족, 생존학생과 부모, 미수습자 가족, 희생자 가족, 생존자, 생존 화물기사, 이주민 희생자 가족, 민간잠수사, 진도어민, 자원봉사자 총 13개의 그룹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로 생존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단원고 재학생과 교사, 군에 입대한 생존자를 찾을 수 있었다.

실태조사단은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가 우연이나 우발적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종 법과 제도, 규제 완화가 만든 예정된 결과임이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국가로부터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다.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5.7.16.

4.16연대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 실천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발족을 선언(6.28.)했다. 국가 최고 권력부터 성역 없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참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304명의 참혹한 희생을 두고 정략 정파적 이익은 없으며 오직 진실만으로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최고의 원칙이다. 이것이 4.16연대의 핵심적 결성 취지이다.

그러나 정부는 4.16연대를 탄압하고 있다. 4.16연대는 3월 첫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성을 선포하고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추모 속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강행 처리했고 유가족과 시민은 이에 저항했다. 마지막 보루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조차 없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정당한 저항을 차별과 캡사이신 물대포로 탄압했고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6.19.)했다.

급기야 7월 16일에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밀실인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의 부재

2015.7.20.

올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6년(1차례 연임) 임기를 끝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부터 국가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 자질도 갖추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 독선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용산 참사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 정권의 정책방향과 다른 인권위 입장의 결정은 미루거나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로 인해 국가인권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인권단체와의 협력단절을 불러왔다. 이는 현병철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겠지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밀실에서 임명하는 행태 및 인선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거진 제도적 문제였다.

올 3월,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세 번이나 보류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위원장 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투명한 추천절차와 임명을 요구하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서도 밀실인선을 진행했고, 7월 20일 이성호 위원장을 내정자로 발표했다. 특히, 이성호 위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다. 현직 법관을 행정부 인사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더해졌다.

한편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인선위원회를 제안하였다. 야당 몫의 인권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ICC의 권고대로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는 골자다. 야당 내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는 장애인권운동을 해온 박김영희를 추천했다. 그러나 국회는 제대로 된 근거도 주지 않은 채 아무런 논의 없이 부결시켰다. 시민사회의 참여로 추천된 최초의 인권위원 후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인 결정이었다.

올 8월, 대법원은 한위수 비상임위원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연임했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위원의 연임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2015.7.20.

‘맞춤형 개별급여’, ‘송파 세 모녀 법’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을 맞아 대규모로 개정되었다.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선전에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은 자신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7월 20일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 아픔뿐이었다.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복잡하고 살인적인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되지 않는 집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빈곤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는 일은 여전하다.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한 달 보장되는 생계급여는 서울 1인 가구기준 43만 원이 고작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의 사회권을 명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권리를 해체시켰다. 대한민국 평균가구 생계비의 의미를 갖고 있던 최저생계비가 해체되었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가 아닌 공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급자들은 자신이 받는 급여의 변경사항이나 이의신청에 대해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 무작정 전화하면 공무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수급자는 여전히 낙인찍힌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201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한국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위험한 적신호가 켜져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복적인 죽음을 멈추자

2015.7.22.

2014년 9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준엄안전위원회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 날,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지기 위해서였다.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민했다. 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그 경영책임자,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관료들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했다. 2015년 7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출범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청원하고, 의원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과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내 ‘위험을 방지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혹은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 묵인, 조장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가중되도록 했다.

이런 처벌에 있어 피해자가 정규직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는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했다.

대형 재난 사고를 계속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많은 시민이 이 추모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파업 지지 발언하면 업무방해 방조죄?

2015.7.22.

2015년 7월 22일,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파업지지 발언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울산 1공장 CTS 생산라인을 점거 농성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지지하는 집회 사회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방조죄’를 적용한 것이다.

파업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연대의 폭을 크게 제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킨다. 이는 전두환 정권 때 신설되어 2006년 사라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파업지지 발언을 두고 ‘업무방해 방조죄’라 판결하는 것은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최병승 씨가 2012년 송전 철탑 고공농성을 했다는 점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2년 후에 한 행동이 2년 전의 업무방해를 방조하는 데 ‘상당한 파급력’을 미친다는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업무방해 ‘공범’은 아니지만 ‘방조’라는 법원의 논리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제3자 개입금지’가 삭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기본권 옹호는 업무방해를 방조한 범죄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불법으로 몰아넣어도 연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천의봉,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출처 : 연합뉴스)

(주)에버코스 사건, 산재은폐 현실을 드러내다

2015.7.29.

2015년 7월 29일, (주)에버코스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쓰러졌다. 공장 내에서 물건을 나르던 중이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는 공장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노동자를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매우 위급하고 중대한 상황인데도 회사는 이미 와있던 구급차를 돌려보냈고 회사와 계약을 맺은 지정병원의 구급차를 불렀다. 그렇게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상이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동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심지어 회사는 산업재해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사건은 자연히 은폐되었다가 8월 JTBC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9월 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주)에버코스 경영책임자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다. (주)에버코스의 사례는 국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산재은폐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산재은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군관사 농성천막
강제철거 이후 맞은
강정 투쟁 3000일**

2015.8.3.

애초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없었던 해군관사가 마을 안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군관사 부지 앞에서 주민과 지킴이들은 농성을 이어가며 망루를 세웠다. 해군 참모총장은 “강정 주민이 원치 않으면 마을에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지사는 2배 이상 규모의 마을 바깥 대체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1월 31일 1000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군 당국은 여지없이 사람과 망루를 철거했다. 일부 해군은 용역으로 가장해 투입되어 공분을 샀다. 행정대집행의 실체는 폭력적인 강제철거에 불과했다. 14시간을 내리 밀어붙이면서 그 과정에서 4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고 24명이 연행되었다. 이렇게 국방부와 제주도정은 지난 9년간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의 무자비한 폭력을 그대로 반복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2007년 5월 18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선 날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3일 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맞았다. 주민 동의 없는 기지건설, 계속되는 인권침해, 불어나는 벌금, 파괴되는 공동체와 생태계, 허울뿐인 ‘민군복합형 관관미항’, 안보 위협,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멈출 수 없었다. 제주도 전역을 걸어 강정마을로 모이는 올해로 4번째인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아직도 강정의 평화를 기원한다.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 이보다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다 / 애들아 / 너희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 / ... / 저 바다를 보아라 / 구름비 해안에 돌쪼레가 보이느냐 / ... / 범섬 너머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느냐.”



강정 3000일을 앞두고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출처: 제주의소리)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2015.8.10.

8월 10일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반대를 위한 오체투지가 있었다. 박그림 설악산 녹색연합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박성율 목사 등은 남설악탐방지원센터에서 대청봉까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이동했다.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선조로부터 물려받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설악산이 돈벌이라는 명목 아래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정부의 케이블카 사업을 비판했다. 다음 세대에 자연 유산으로서의 설악산을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온 몸으로 외쳤다.

오체투지 일행은 충청대피소를 지나며 일반 등산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환경단체만이 아니다. 설악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케이블카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2005년 창립된 곳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대다수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여권번호, 사업장주소, 핸드폰 번호 등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명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위한 수단일 뉘 수 있기 때문이다.

2015.8.20.

이후 노동부는 명부 제출 거부를 빌미로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주노조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1심 노동부 승소, 2심 이주노조 승소를 거쳐 무려 8년 간 대법원에 계류되었다. 대법원 계류 사건 중에서도 최장기 미제 사건이다. 무려 10년이 지나 2015년 6월 25일, 이주노조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주노조는 한 달간의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2015년 8월 20일, 마침내 이주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10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에 등불이 켜진 날이었다.



페미니즘으로 귀여하게 만나다

2015.8.21.

언니네트워크가 주최한 ‘여성성소수자를 위한 2015 페미니즘 캠프 - 풍문으로 더럽소(The Love Show)’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2015년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2박 3일 간 진행된 캠프에는 50여명의 성소수자들이 모였다. ‘커밍아웃이 어려운 나, 비정상인가요?’, ‘독립생활백서 : 혼자서, 둘이서, 모두와’, ‘덕들 : 페미니즘으로 활고 귀여하게 까는’, ‘음기병천 : 릴레이 야설쓰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 신나고 맘나게 운동회를 하고, 정말 ‘더러운’ 모듬별 공연까지 함께 했다.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페미니즘 캠프는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가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에서 몸과 마음을 해방시키는 공간이었고,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고민하며 공감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여성주의 문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캠프, 언니들~ 잊지 말아주세요!



적색 신호를 향해, 그린라이트를 켜라!

2015.8.21.

2015년 8월 21일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부르짖으며 광화문 지하에서 농성을 한지 1000일을 맞았다.

5월 18일부터 1000일을 맞이하는 8월 21일까지 98일 동안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녹색의 그린라이트 켜기 투쟁을 전개했다. 장애인들을 향해 위험하게 켜진 빨간불에 대한 경고였다.

나날이 뜨거워지는 태양 아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녹색 조끼를 입은 장애인들은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쳤다. 장애인들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잠시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무차별한 항의와 폭력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려는 몸부림, 더 이상 짐승처럼 죽기 싫다고 온 몸으로 그린라이트 투쟁을 해나갔다.

대한민국 역사상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길바닥에서 3년이나 농성을 한적은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기나긴 외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바짝 숨통을 조이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빨간불을 위험하게 반짝거리며 달려가는 정부를 향해 오늘도 우리는, 녹색의 그린라이트를 켜고 외치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노라고!



학습시간 줄이기운동과 강제학습 반대운동

2015.8.26.

2015년 한해 동안 여러 청소년인권단체들이 학습시간 줄이기와 강제학습 철폐를 주요이슈로 제기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전국 6,261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조사를 토대로 8월 26일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대다수가 겪고 있는 학습부담 △너무 이른 등교, 너무 늦은 하교 △저녁도 주말도 없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 공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야간과 방학, 점심시간, 주말에까지 강요 △충분히 자지도, 편히 쉬지도 못하는 생활 △성적압박으로 강제되는 사교육 참여 등의 문제를 짚으며 너무 긴 학습시간 그 자체가 청소년인권침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①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 ② 방학일수 늘리고 수업일수 줄이고! ③ 보충, 야자, 학원 모두! 강제학습 금지! ④ 야간/주말/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 ⑤ 과잉학습으로 몰아넣는 경쟁교육 개혁! 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http://studyoff.org/>)

여러 지역과 모임들에서도 강제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광주에서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제학습 실태를 고발하면서 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주에서도 중고생연대가 강제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청에 강제학습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좋은교사운동 등에서도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주장하는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하며 학생들의 쉬고 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8월 30일, 도쿄에서 평화를 외치다

2015.8.30.

일본 아베 정부는 2015년 5월 두 개의 법률개정안(평화안전법 제정비법안, 국제평화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명 '전쟁법안'이다. 9월 19일 아베 정부는 자위대 해외파견과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전쟁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보통국가'라는 명분을 앞세워 식민지 침략 및 전쟁을 위한 총동원체제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동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아베 정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전 세계 민중들의 평화권을 묵살하였다.

그러나 평화는 짓밟힐 수 없다. 8월 30일 도쿄에는 12만 명의 일본 시민이 모여 전쟁법안 반대를 외쳤다. 196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일본 헌법학자 90%가 위법이라 주장했다. '일본 사람도, 외국 사람도 죽고 죽이게 만들지 않겠다'는 이들의 염원이 야말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시작일 것이다.



45일간의 단식...

여전히

해고노동자들의 삶은

70미터 고공에

2015.8.31.

2009년 쌍용자동차 사측의 회계조작, 기획부도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신차 티볼리는 열심히 팔렸고, 회사는 정상화의 수순을 밟는 듯 했지만 농성장과 분향소는 냉랭했다. '26'이던 죽음의 숫자는 '28'로 늘었다.

2014년 12월 13일 김정옥, 이창근 두 명의 해고노동자가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 올라 101일 간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회사와의 대화가 무려 65개월 만에 열렸다. 그러나 교섭의 성사와 함께 쌍용자동차 회사와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3주체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이른바 '4대 의제'(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쌍용차 정상화 방안, 희생자 유가족 지원대책)는 별다른 진전 없이 재개와 중단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사측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교섭이 난항을 겪자, 김득중 지부장은 교섭 재개 7개월만인 8월 31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공장 앞에서 시작했다. 또한 9개월째 제자리걸음 상태인 교섭을 올바로 풀기 위해 김정옥, 고동민, 이갑호, 윤충열, 유계선 5명의 해고노동자가 인도 마힌드라 본사 원정길에 나섰다. 인도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손을 맞잡았고, 인도노총은 마힌드라에 면담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마힌드라 그룹 부회장, 상무와 면담이 성사되었고, 쌍용차 이사회의 코엔카 의장을 만났다. 45일을 굶고 보름 넘게 인도를 누빈 결과 교섭은 다시 재개되었다. 진정성 있는 교섭을 약속 받고 다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회사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겪었던 7년의 세월은, 아니 지금도 견디고 있는 시간은 7년간 한발도 전진하지 못한 우리 사회 노동인권의 현주소다. 사회적 죽음과 해고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기업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다. 사회환원 사업 등을 벌이며 이미지를 관리하지만 바로 눈앞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기업의 민낯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손을 맞잡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국내의 언론은 터키 해변에서 발견(현지 시간 9월 2일)된 세 살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사진을 집중 보도했다. 언론은 지중해에 내몰린 난민을 조명하며 전쟁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유럽 국가를 비판했다. 한동안 국내 난민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를 오직 3명만으로 제한할 정도로 난민 인정율이 현저히 낮다.

한국 정부가 인색한 것은 시리아 난민만이 아니다. 2015년 8월, 한국은 525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전체 신청자 12,752명 중 4%에 불과하다.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38%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어려운 절차를 통과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난민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대부분의 한국 난민은 '인도적 체류'라는 불안정한 자격으로 생활하는 실정이다. 극심한 인종차별과 혐오정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 발생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난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심과 반난민정서를 자극하여 공포심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난민들이야말로, 바로 그 테러를 피해 온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약속도 인권도 헌신짝 취급하는 풀무원

2015.9.4.

9월 4일,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운전도 모자라 긴 운행이 끝나면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도 화물 기사들에게 떠넘겨졌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에서의 위험천만한 사고 외에도, 물건 상하차 도중에 손가락, 발가락 골절은 일상이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풀무원은 '지입차주이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치료비 보상은 커녕 요양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차비용까지 화물노동자에게 물게 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작년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투쟁을 하여 풀무원 측으로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풀무원의 인권유린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안전화를 지급해달라는 요구에 용역들이 신다버리고 간 헌 안전화를 던져주었다. 노사 간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9월 4일은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한 날, 권리밖의 노동자들이 인간선언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이다.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 9.12희망버스

2015.9.12.

8월 18일,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였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약에 맞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개약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은 고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사자들은 고공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하반기 노동재앙에 맞선 싸움을 시작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9월 12일 서울과 거제, 부산을 잇는 희망버스가 제안되었다. 9월 12일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해고자 강병재가 크레인에 오른 지 157일 되는 날이고, 부산에서 막걸리회사 생탁 노동자 송복남과 택시노동자 심정보가 광고탑에 오른 지 150일, 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이 국가인권위 광고탑에 오른 지 94일이 되는 날이었다.

희망버스의 요구는 명확했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으로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들려는 저들에 맞서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 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희망버스는 투쟁하는 버스였다. 불법파견 현행법 정몽구에게 항의하고, 토요일에도 배를 만드는 대우조선 4만 비정규직을 만나 배와 염서에 희망을 담아 나눠줬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산시청에 항의의 목소리를 전하고, 강성노조 때문에 3만불 시대가 되지 않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고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막아내겠다는 선언을 하는 버스였다.

희망버스는 끝났고, 강병재는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송복남, 심정보, 최정명, 한규협은 하늘에 있다. 풀무원 노동자들도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야 정부가 노동개약을 철회할까. 노동자의 권리를 땅에서 누리는 날이어서 빨리 와야 한다.



9.12 희망버스 승객들의 거리 행진 (출처: 민중의소리)

노동시장 구조개약을 위한 노사정 야합

2015.9.15.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3일 노사정위원회는 핵심 쟁점과 관련한 처리 방안에 합의했고 14일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한국노총은 회의를 재개, 결국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였다. 13일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후퇴시키는 내용 일색이다. 기존의 법제도가 보장하던 권리조차도 허물어뜨렸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인 노동자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노동시간을 오히려 늘리고, 파견노동을 확산하고 기간제 고용의 정규직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등 노동자 권리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약의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갖춰지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16일 즉시 5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옥죄는 데에 동원되었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합의라는 명목의 강요만 밀어붙이고 있다. 노사정 합의라는 기만을 깨고 개약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용기와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9월 15일 기만적인 노사정 '합의' (출처: 참세상)

**종단 부당 개입,
총장은
퇴진하라...**
동국대 학생들의 투쟁

2015.9.17.

을 한해, 동국대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논문을 표절한 보광스님이 총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다. 총장 선출 당시부터 종단이 개입해 다른 후보자들을 일부러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총장 선출 전에 종단 스님들이 따로 만나 보광스님의 총장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또한 지난 2월 동국대 학교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검증 결과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종단과 학교본부는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학원 학생회장인 최장훈 씨가 4월 21일부터 45일 간 학내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9월 17일에는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그러나 재단과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10월 15일부터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단식을 시작했다. 학내에서는 교수, 교직원들도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학생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종단이 일방적으로 학교 총장을 뽑고 학교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생들이 주인 되는 대학을 만들자는 것. 이를 위해 구성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총장 보광이 퇴진하고, 학내 문제에 부당 개입했던 일면스님이 이사에서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12월 2일 단식 50일째인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장 보광의 거취가 언급되지 않아 문제는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대학이 사유화될수록 민주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럴수록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는 무시되기 쉽다. 동국대 학생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의 모든 대학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다.



교사는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

2015.9.23.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범외노조’를 통보했다.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협박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있으면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누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인가”를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주성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전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다. 조합원들은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정권의 불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지금까지 전교조는 투쟁의 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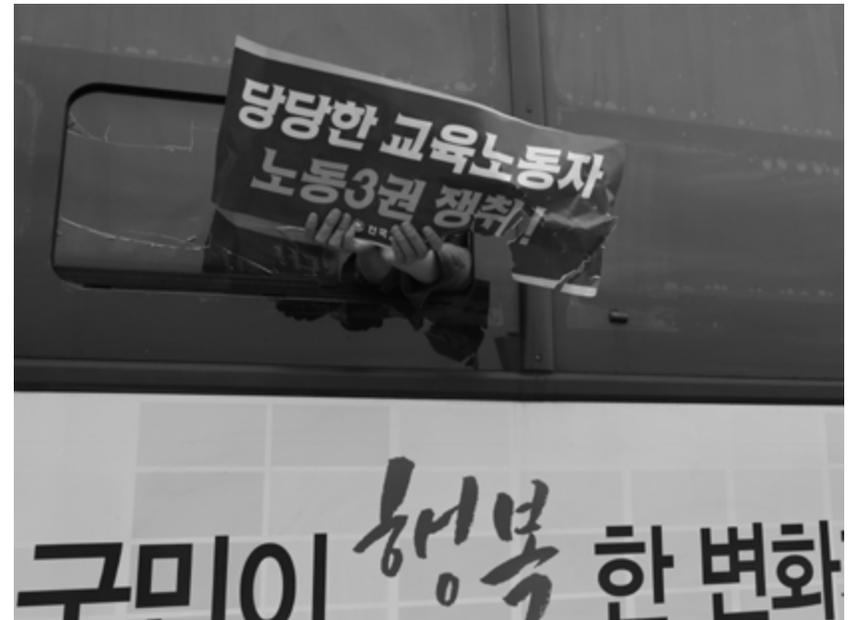
법의 안팎을 오가는 법적 대응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반복되고 있다. 2014년 7월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범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동시에 해당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조합원 자격 결정은 노동조합의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는 ‘노조의 자주성’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 2조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모든 산별노조 중 유독 교원노조에게만 해고자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보편적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6월 3일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11월 16일 서울고법은 여전히 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며 범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사는 노동자이며, 노동3권은 부정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다. 정권의 어떤 협박에도 전교조가 민주노조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참여한 이유도 그것이다. 단결하고 함께 행동할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후 어떤 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전교조는 1989년 굴종의 삶을 떨쳐 일어난 그 순간처럼 참교육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9월 23일 국회본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구조개혁 반대 집회 중인 전교조 조합원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된다는 경찰 차량에 끌려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차량 밖으로 “노동3권 쟁취”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도 제약하는 공권력의 모순과 기만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포석 놓기

2015.10.1.

세월호 1주기 집회에 국가 폭력이 한창 극성을 부리던 2015년 4~5월, 인권침해감시단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경찰의 집회 방해에 항의하는 방법을 담은 짧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뉴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널리 퍼뜨렸고,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접근가능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국가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 물리력이 집회시위를 어떻게 율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좋을지에 관한 정보를 담아, 집회 참여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집회시위 매뉴얼을 앱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집회시위 제대로' 앱이다.

이미 인권단체들이 제작한 집회시위 매뉴얼 책자가 있었지만, 긴급한 순간에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다는 점과, 변화하는 복잡한 법규와 판례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앱으로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통해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거나 연행됐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아서 항의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현행 법 상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의 관점에서 더 요구해야 할 집회의 자유도 담았다. 앱 프로그래밍 소스는 기트허브(github)를 통해 공개돼, 관심 있는 개발자 누구나 개발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김무성 막말에 9년째 싸우는 기타노동자들 곡기를 끊다

2015.10.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는 동노동개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일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9월 3일 콜트콜텍 언급도 그런 맥락에 있었다.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 버렸다.”

이 발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비도덕적인 경영행위와 노조 탄압을 감싸는 발언이었다. 콜트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56명을 해고한 것은 2007년 3월이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콜텍을 위장 폐업하고 67명의 노동자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 노동조합을 피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박영호 사장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미 2011년 대법원은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폐업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의 발언은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였다.

김무성의 발언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김무성의 발언이 9년째 이어가는 기타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모욕하는 것으로 느꼈다. 이런 발언이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노동시장구조 개약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김무성의 발언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대한 문제로 인식했고 10월 5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무성 발언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노동계약 중단을 요구하며 시작된 단식은 12월 1일 현재, 58일째(방중운 지회장 45일, 이인근 지회장 13일)를 보내고 있다. 정리해고 투쟁 3,226일째인 최장기 투쟁 사업장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올해 겨울까지도 시린 길바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향한 분노의 외침, 여성성소수자 결기하다

2015.10.10.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1851년, 흑인 여성 노예해방운동가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의 연설 한 구절이다. 여성의 권리조차 백인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을 뿐 흑인 노예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 이 발언은, 2015년, 성차별과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다며 ‘양성평등’을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여성가족부를 향한 분노의 외침이 되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다는 공식입장을 내고 개정을 요청했다. 여성성소수자결기대회는 이에 대한 항의행동으로 기획되었다. 날로 보수화되어 가는 한국의 성평등 행정에 맞서 “성소수자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300여명이 함께한 10월 10일은 한국에서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여성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드러낸 날이었다. 또한 여성성소수자결기선언을 통해 성소수자가 처한 현실이 성차별이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길임을 확인하면서, 성소수자차별-성차별에 함께 맞서는 LGBTI* 여성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존재마저 지우려는 자들에 맞서, 이 날 모인 여성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LBTI ;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사내하청 정규직화 싸움은 계속된다

2015.10.11.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가 6월 11일 서울 시청 근처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에 대해 기아차 ‘정규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광판에는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번 농성은 다른 고공농성에 비해 명보에듀넷이라는 광고업체가 농성자들을 심하게 탄압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물과 음식 반입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의 노력으로 8월 15일부터 인권위가 물과 음식을 전달하게 됐으나 인권위가 10월 명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음식과 물 전달을 손 놓고 있는 사이 용역깡패들이 농성자들을 끌어내리려 했다.

10월 11일 용역깡패들이 긴 작대기에 낫을 달아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였고, 동시에 전광판 문을 열고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 내리려 하였다.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항의방문하고,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노동자들이 정몽구가 사는 한남동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자 인권위와 명보에듀넷은 태도를 바꾸었다. 현재 물과 음식은 전달되고 있으나 정규직화에 대한 현대차의 태도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 진료 보라매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2015.10.22.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HIV감염인에게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하였다. “환자의 포말이 튀게 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된 공간 (전용체어를 포함한 치료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란 점을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 알리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은 2015년 6월 3일 “보라매병원 내규인 ‘HIV감염 관리지침’에 치과진료시 표준예방지침(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외의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서울시도 “우리시에서는 보라매병원으로 하여금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HIV감염 등을 이유로 진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HIV감염인이 스케일링을 받으러 간 진료실의 파티션과 그 주변, 그리고 진료용 의자에 비닐을 씌워놓고, 폐기물통에 HIV 표식을 붙여놓는 등 차별적 대우가 지속되어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의료기관에서의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은 만연해있다. 2011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HIV감염인에게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거부했고, 2014년 국립경찰병원에서 치과, 피부과 등의 진료를 거부한 바 있으며, 2014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피가 튀는 것을 가릴 막”이 없다는 이유로 중이염수술을 거부하였다.

피해는 병원에서 거부당한 순간의 모욕감과 수치심, 좌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반복해 경험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라고 차별을 내면화하게 되거나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 ‘특수장갑이 없다’, ‘가림막이 없다’, ‘전용체어가 없다’……. 의료기관에서 또 어떤 별별 이유를 댈지 HIV감염인은 병원 문턱에 설 때마다 두렵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한 공론화 작업 이어져

2015.10.25.

직장 내 괴롭힘을 그저 직장인이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괴롭힘은 개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동료관계를 파괴한다. 2014년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이어 2015년에는 ‘사무금융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괴롭힘의 실태를 알려 문제를 한국 사회에 공론화시키고자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고 결과는 10월 25일에 발표했다.

KT 조사결과가 구조조정과정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면 사무금융노동자 조사 결과는 성과주의에 의한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전략적 성과관리라는 이름으로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제도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법 개악 중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화하며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5.10.29.

10월 29일 오후 1시 40분경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51번 철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 1명(남성, 50세)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김 씨는 그날 누나의 보리논에 농약을 주러 왔던 길이었다. 철탑 공사 현장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논에서 제초제를 주다가 물을 보충하기 위해 누나 집으로 가던 중 김 씨는 한전 직원 200여 명과 주민 20여 명이 대치 중인 모습을 보게 됐다. 누나는 공사를 막다가 쇠파이프 더미에 손이 깔려 비명을 지르고 있던 중이었다. 김 씨는 누나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제지당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농약을 마셨다. 다행히 위세척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오랜 갈등 과정에서 대안노선이 확인되었고,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의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긴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전은 '낙장불입'의 자세로 불도저처럼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목숨줄 끊으며 전깃줄 세우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행동

2015.10.31.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행진을 하고 10월 31일 1차 선언을 발표하는 등 저항하는 행동에 나섰다. 행동에 나선 청소년들은 국정화의 의도가 친일독재미화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만들기에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획일적 교육을 비판했다.



10월 31일 진행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 행동 (출처: 오마이뉴스)

프로젝트 그날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인권의 자리에서 더하고 싶은 이야기

☞ 국정화는 국민의 기억을 통제하는 사태로서 21세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억압에 맞서 해방을 꿈꾸어온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지배집단의 횡포에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퇴행에 맞서 함께 싸울 때 비로소 '쟁취' 되는 것이 아닐까요.

☞ 국정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해요.

☞ 10월 27일 4.16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가 기억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교사와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1인 시위와 학생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운운하며 형사고발 했습니다. 학생들 또한 1인 시위와 학생 집회 과정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제기되는 등,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 인권현실(표현의 자유 침해)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복지원, 배제와 감금의 역사를 쓰자

2015.11.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벌써 3년이
란 시간이 흘렀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27년이
란 시간을 '내 탓이오'하는 자책으로, 혹은 '살아남기' 위한
의도적인 외면과 망각으로 보냈다. 이와 비교한다면, 최근 3
년은 다시 국가로부터 외면 받고 비국민 취급당한, 설움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장애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랑인'이라는 모호한 이름을 붙여 청소의 대상으로 삼았
다. '사회정화', '성장과 효율'이라는 말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청산되지 않고 비틀어진 일제 강점기의
잔재들이기도 하다. 최근 알려진,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존재했다는 안산 선감도 섬에 있던 부랑아시설 '선감학원'
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제 때부터 존재한 '배제와 격리,
감금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암매장의 방식으로 죽음까지 존엄을 훼손했다.

잔인한 인권유린의 기억을 끄집어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고통스런 기
억의 칼날은 또다시 자기를 향하기도 한다. 참혹했던 과거
의 경험은 온전히 자기 몫으로 남을 뿐이고, 국가와 사회는
목소리를 듣는 척 하지만 '진실규명'이란 본질 앞에서는 외
면하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발의된 일명 '형제복지원 사
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책상 위에 잠자
고 있다.

4월 28일부터 58일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국회 앞
노숙농성을 진행했고 7월 3일 국회 안전행정위 주최의 공
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
든 지금까지 법안은 잠들어있다.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
상규명을 위한 대책위'는 11월 4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을 통한 진상 규명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상처만 남아
있는 생존자와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 그리고 또다시 시설
이나 정신병원 등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등에 관한
정책, 그리고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국가에
질문을 던진다. "왜 나를 잡아가두었냐!"고. 국가는 그 물음
에 화답해야 하고, 우리는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 기억하
고 진실규명에 함께해야 한다.



김석기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

2015.11.5.

2013년 10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의 사과와 퇴진, 처벌을 요구하며 다양한 행동을 벌였다. 그러나 김석기는 사실 경비구역까지 동원해 공항공사 주차장에조차 접근을 막으며 폭력적으로 끌어내기 일쑤였다. 1인 시위를 하던 유가족들을 끌어내고 폭행해 119까지 실려 간 상황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2013.11.13.)하더니 오히려 죄를 뒤집어씌웠다.

2015년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서영효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해산 명령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적법한 것인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제 곧 용산참사 7주기(1월20일)가 된다. 김석기는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경북 경주)한다고까지 거론되고 있어 원통할 노릇이다. 김석기가 아무리 용역폭력과 벌금, 연행으로 유가족들을 협박해도 한 맺힌 유가족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김석기를 비롯한 살인진압, 살인개발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서 세울 것이다.



한국의 자유권 현실, 유엔에서 평가받다

2015.11.5.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자유권 상황에 대한 권고(최종권해)를 내렸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을 국내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내린 권고다. 마지막 심의를 받은 게 2006년이었으니 거의 9년 만이다.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자유권 심의를 위해 1년 전부터 함께 대응 활동을 해왔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대해 2006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전원 석방 및 사면,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권고는 유례없는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1년 내로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해당 권고를 잘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자유권 권고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유엔에 알리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25년만의 자유총선, 버마에 민주화의 씨앗이 뿌려지다

2015.11.8.

11월 8일 버마에서 53년간 이어지던 군부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로 가는 씨앗을 심어줄 자유총선이 25년 만에 치러졌다.

버마의 민주화운동은 지난한 여정을 겪어왔다. 1988년 8월 8일 대학생, 불교 승려, 시민이 힘을 모아 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한 전국 규모의 8888항쟁이 일어났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90년 총선으로 이어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82%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아쉽게도 군부의 철권통치로 귀결되었다. 이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명이 희생되기도 했으나 민주화와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다.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의회의석의 59%를 확보하여 대통령을 배출하고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오랫동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놓지 않은 버마 사람들의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평화로운 정권이양, 소수민족 포용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버마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차별실태 조사 발표

2015.11.1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14년 총 1,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 고용, 의료, 국가기관 등 광범한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를 파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으로 발주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최초의 성소수자 대상 직접 조사이며, 분석 결과 각 현장에서 성소수자들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 차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반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 2014년 수행된 인권위 인권실태조사 18건 중 2건의 최종보고서가 홈페이지에조차 공개되어있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사다. 인권위는 반성소수자 진영의 항의를 의식하여 위원장 교체기, 국정감사, 심지어 인권위 근처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이유로 공개 및 발표회를 미뤘은 것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인권위에 인권위원장을 진정하는 등 이 실태조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 11월 10일, 20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디어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성황리에 발표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인권위가 실질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견하고 지켜보는 일은 역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11월 11~12일, 핵발전소에 맞선 영덕 민심의 승리

2015.11.11.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사회를 열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노후 원전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을 막아내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1~12일, 약 4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북 영덕에서 한국 탈핵이 진정 머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영덕 곳곳 20개 투표소에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2010년, 전 군수가 399명의 동의만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것에 굴하지 않고 영덕군민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추진된 주민투표였다. 이를 두고 한수원은 '불법투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물품공세를 벌였고, 행정은 이를 묵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주민투표를 탄압했다.

그 가운데 지역주민과 전국의 시민사회는 민간주도의 공정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소확대정책과 외압 속에서도 주민들은 기표로 권리를 행사했다. 그 결과, 투표율은 인명부 대비 60.3%. 이중 유치반대는 무려 91.7%에 달했다. 영덕의 숨겨진 '진짜 목소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탈핵을 염원하는 수많은 마음이 빚어낸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영덕 주민들은 "영덕의 미래는 영덕 군민의 손으로!"라는 메시지를 각자의 마음에 품었다. 핵 없는 사회,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사회를 향해 내딛은 큰 걸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묻다

2015.11.12.

1975년 7월 25일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 신고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0월 31일 개정 시행되고 11월 6일 공포되었다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는 1968년 도입되었던 12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르는 동안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정보인권의 가장 큰 침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가 행정편의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이 출생할 때마다 강제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갖는 존엄성 침해 논란도 그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만능 국민식별번호는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도구가 되어 버렸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와 디지털 환경에서 다방면의 만능식별자로 사용되게 되었고, 개인의 모바일과 인터넷 활동이 손쉽게 추적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노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와 신원도용이 증가하였다. 유출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쳐 언제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이 요구를 묵살해 왔다.

2015년 11월 12일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40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묻게 된 것은 그만큼 많은 인권침해가 고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란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밤에는 학교와 학원의 불을 끄자

2015.11.12.

“멈춰라~ 입시경쟁! 풀려라~ 다크서클!” 11월 12일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청소년, 교육단체 등은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할로윈행진과 거리 집회, 기도회 등으로 단체들은 입시경쟁교육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능시험일 오전, 대학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학거부선언도 있었다. 청소년의 교육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에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간 의의가 있다.



75명의 방진복 퍼포먼스

2015.11.13.

11월 13일 금요일 삼성 본관 앞에서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75인의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진복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삼성을 바꾸자, 삼바대회’였다. 시민, 피해자, 활동가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고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야 했던 이들의 이름을 등 뒤에 달고 삼성 본관을 돌았다. 쓰러지기도 했다. 퍼포먼스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40일 가까이 차려진 반올림 농성장에서 시작하여 끝이 났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지 8년.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직업병을 제보해준 노동자는 220명, 사망한 노동자는 75명이었다. 2015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반올림에 제보가 들어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직업병 문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투병 중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있는 보상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삼성은 여전히 보상위원회만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뿐이었다.

75인의 퍼포먼스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만 외면하라는 항의였다.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뤄야 했던 이들, 투병의 고통에도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외면당한 이들의 서러움의 표시였다. 비가 우리의 옷과 몸을 축축하게 적셔도, 삼성의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은 젖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으며, 직업병 문제가 어서 해결되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삼성이 책임져라, 사회적 약속 이행하라” 삼성이 아프게 들어야 할 구호가 빗속을 뚫고 메아리 쳤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반올림의 농성은 50일차가 지난 지금도 강남역 8번 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2015.11.14.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검열과 규제 앞에서, 차벽과 물포 등 경찰의 물리력 앞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시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공권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벌어진 경찰폭력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정부는 일찌감치 갑호비상령을 내리며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적'으로, '폭력집단'으로 내몰고 더 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아님을 선포하였다.

11월 14일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라는 방식으로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 차벽은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집회 봉쇄 조치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해 깊은 우려를 보였다. 차벽과 물포라는 두 물리력이 조합되어 발휘되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었다. 게다가 물포 살수는 과거와 달리 '지속적이었고 집중적'이었다. 직사가 다반사였고 특정인을 향한 집중살수는 심각했다. 그 과정에서 백남기 어르신을 비롯한 몇몇 시민들은 쓰러져갔다.

오랫동안 경찰폭력은 불처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누가 물리력 사용을 명령했는지, 집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폭력의 불처벌 관행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 출범하였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백남기 어르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표현하고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과 책임자를 조속히 밝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익전문가의 탈을 쓰고 정부의 입장만 대변

2015.11.16.

11월 16일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의견인 것처럼 제출되었으나 최소한 노사정위원회 특위의 전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위 ‘전문가’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 입장에 다를 아니었다.

이들의 의견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옥죄는 것이었다.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막았다. 기간제 노동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강제 규정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기간제 노동기간 확대와 ‘쪼개기 계약’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제조업 뿌리산업과 고령자, 고소득·전문직에게까지 파견을 확대하면서 이를 채용기회 확대라고 포장했다. 불법파견의 징표로 판단되어 온 원청의 지배개입 증거는 원청의 배려로 미화했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렇게 노동개약을 시도해 나가는 정부의 입장을 편들어 주겠다는 것, 소위 ‘공익 전문가 검토의견’의 목표는 오로지 그것일 뿐이다.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정부 정책에 힘을 실으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수은중독으로 인한 산업재해

2015.11.17.

광주광역시 하남 산업단지에 위치한 남영전구에서 2015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지하 작업장 형광등 제조 설비의 철거 업무 과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농도의 수은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은 2주간 철거 작업을 했던 60세 김 모 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김 씨는 작업 이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움증, 기력저하, 손발 저림 등의 증상과 함께 걷는 것도 어려워졌다. 전북에 소재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수은 중독을 진단받은 김 씨는 지난 8월 서울에 소재한 병원으로 옮겨 줄곧 치료를 받았다. 이후 함께 철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신청을 했고 공단은 지난 11월 17일 산재를 신청한 4명의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1988년 협성제공 공장에서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15세의 나이에 사망한 고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건은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다.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건은 현실을 다시금 일깨우며 큰 숙제를 던져주었다.



수은중독 방지를 노동청 규탄 및 남영전구 사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출처: 민중의 소리)

다시 닭을 튀긴 날

2015.11.17.

홍대에서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 건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삶을 짓밟는 일이었다. 8년간 열심히 장사를 한 삼통치킨에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걸고 두 차례의 강제집행, 심지어는 단전까지 자행했다.

11월 17일은 2차 강제집행이 들이닥친 날이다. 야만적인 강제집행 과정 중에서 임차상인 한 명은 용역들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 뼈가 골절되었고(전치12주), 또 한 명은 목과 얼굴을 가격당해 뒤로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임차상인은 “내 삶의 터전, 내 가게를 지켜달라”고 절규했다. 2차 강제집행은 “완료”로 일단락되었다.

전면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가게, 이미 다 털린 가게 앞을 막고 서있는 경찰. 집기를 실은 채 대기 중이던 트럭에 사람들이 올라갔고 집기를 다시 가게로 들여놓았다. “불법 점유”,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문제가 아니었다. 잘못된 법에 의한 판결문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이것이 부정의라고 마음을 모았다.

임차상인들과 연대인들은 집기와 전선을 끌어 모아 부엌을 재건했고 유리파편들을 쓸어 담았다. “오늘 반드시 다시 닭을 튀기자” 이 날 저녁 삼통치킨은 영업을 재개했다. 임대인이 삶을 빼앗으려 했던 자리에서, 임대인이 하지 못하게 한 임차상인들의 ‘장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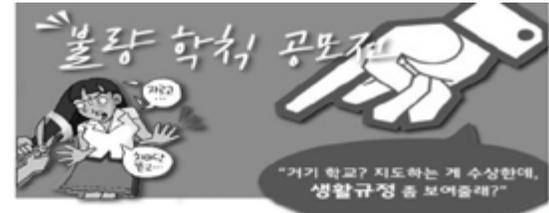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는 학교 안의 규칙들 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칙들을 ‘불량학칙’이라는 이름으로 제보 받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그리고 11월 24일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2015.11.24.

학생들로부터 받은 107개 제보 중 가장 많이 제보된 사례는 복장규제에 관한 것이었다. 추운 겨울에도 외투를 못 입게 하는 것을 비롯해 획일적인 두발복장 규제 등의 문제는 여전했다. 그외에도 자의적인 벌점제, 연애 탄압, 성별이나 성적 차별, 고3 학생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면 처벌하거나 운동장을 못 쓰는 사례 등이 제보되었다.

발표회에서 운동본부는 불량학칙들을 공개하면서 학교 규칙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권적으로 변화해야 할 원칙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의 반인권적인 규칙의 사례들을 공론화하면서 학교 규칙의 문제점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



2015 불량학칙 공모전 결과 발표회

1. 2015 불량학칙 공모사례 발표 - 김영구
2. 공모사례로 본 현 학칙의 문제점 - 조영선
3. 현 학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 공현

일시 : 2015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주최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술검열 반대와 문화민주주의를 지키는 문화예술인 만민공동회

2015.11.27.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던 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행위들이 유령처럼 다시 살아나서 이 사회를 떠돌고 있다. 문화예술계에는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심지어 대선 당시 박근혜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에 대한 검열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기금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배제, 홍보까지 다 나온 작품을 방해하고 강제 중단, 고소·고발을 통한 벌금부과, 체포연행, 예산축소 협박, 예술감독 회유와 같이 다양하고 치졸하다.

반복되는 예술검열과 문화행정 파행에 분노한 예술가들은 11월 27일,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에 모였다. 만민공동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굴종을 강요하는 정부의 예술검열에 반대하자, 예술가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현행 예술지원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자, 예술검열 사례들을 발굴하자, 예술검열 반대를 위한 퍼포먼스를 벌이자……. 이 모임은 이후 지속적인 만남과 논의를 통해 예술검열에 대응하는 범예술계의 연대체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선언하라 우리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015.11.28.

2014년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제안하는 추진대회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했던 말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회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자는 제안이었다. 진실과 안전, 치유와 회복을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들을 짚어가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12일 열린 4.16인권선언 준비회의에서는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4월 14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4.16인권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들과 인권선언문의 형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차례의 회의마다 수십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4.16인권선언을 풀뿌리토론으로 더욱 확장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1차 전체회의가 열린 7월 11일, 전국에서 모인 2백여 명의 인권선언 추진단이 첫 토론을 시작했다. 토론은 세월호 참사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문제를 짚어내고 이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시작된 풀뿌리토론은 이후 석 달 여에 걸쳐 70회 이상, 1,100여 명이 참여하여 850개 이상의 권리가 제안되는 토론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7월 15일에는 세월호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려 놓치기 쉬운 여러 인권침해실태가 밝혀졌다. 다양한 피해자 그룹을 심층 면접하면서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경험을 드러냈고 정부의 참사 대응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11월 28일,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120여 명이 참석했다. 모듈별로 진행된 열띤 토론은 선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약속을 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되었다. 4.16인권선언은 이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을 거쳐 12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재앙...
'국민투표'로 확인한
96%의 민심**

2015.11.28.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9월 13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 평가했다.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 앞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갈 사람들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았다.

합의 직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이며 합의내용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십억의 광고비를 들여 '노동개혁'이 실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킬 수 있을 것처럼 광고했다.

5천만 국민의 삶을 바꿔놓을 노동정책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각계각층 550여 명이 모였다. '노동개혁'이라고 최면을 거는 저들의 여론전에 맞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묻자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10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거리에서, 노동조합에서, 전국 곳곳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2,350개의 투표함이 배포되었고, 투표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였다.

11월 28일 국민투표 개표 결과, 148,98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96%에 해당하는 143,081명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했다. 저들이 주장하는 여론조사와 다르게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심은 압도적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민심에 따라 당장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민심은? 11월 28일 국민투표 개표식 (출처: 민중의 소리)

유엔에이즈 (UNAIDS), 한국의 낙인지표조사 를 시작하다

2015.11.30.

2015년은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인이 발생하지 30년이 되는 해다. 에이즈는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며 공포를 상징하는 대표적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정부도 인정하듯 고혈압과 당뇨처럼 관리만 잘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다. 감염인을 향한 차별과 낙인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치료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에이즈환자가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은 2014년부터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조차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별적인 진료행태가 이루어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에이즈 혐오는 더 강화되어 에이즈환자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세금을 축내고 있는 '나쁜 시민'으로 묘사하고 있다. HIV/AIDS 감염인들이 서 있는 인권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마치 격리와 공포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듯하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 공동기획단은 HIV/AIDS 2015년 10대 이슈와 함께 유엔에이즈 낙인지표(Stigma Index) 조사 계획을 발표(11.30.)했다. 한국의 HIV/AIDS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에 주목하면서 유엔에이즈는 감염인 당사자들의 유일한 자조모임연합인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낙인지표 조사는 15명의 감염인 조사원이 직접 150명의 감염인을 만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나라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감염인들이 느끼는 차별과 낙인의 경험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http://www.stigmaindex.org>)



강정의 지향은 마르지 않는다, 강정 비당처럼

2015.12.1.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식에 즈음해 12월 1일 강정마을 공사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동아시아 평화 위협할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띠잇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해군은 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 전대를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전단이 이전하면 제주 해군기지에는 최대 3,200명이 주둔하게 된다.

전대 창설식, 기지 완공식에만 열을 올리는 해군은 마을 내 계속되는 갈등과 저항을 모르쇠하고 있다. 8월 26일 국방부는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국가가 마을을 또 다시 할퀴었던 군관사 농성천막 철거(1.31.)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청구하기까지 하였다. 또 공사지연으로 인한 비용 237억이 발생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이미 수억 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12월 2일 여느 때처럼 공사장 앞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는 도중 강정현장팀의 천주교 공소회장이 레미콘에 치여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아랑곳 않고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 사람들을 고착시켰고, 이에 항의하던 지킴이 2명을 연행하였다. 이 사고로 공소회장은 발가락 골절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문정현 신부와 지킴이들, 마을주민들은 공사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경찰과 해군에 항의하고 있다.

얼마 뒤에는 기지 완공식도 있겠지만, 해군기지 반대 싸움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강정의 이웃으로 함께 살고 함께 지키며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다 지어도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 그리고 다시 시작

2015.12.5.

12월 5일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밀양 송전탑이 포함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계획으로부터 처음 입안되었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자신의 마을과 집, 논밭으로 끔찍한 초고압 송전철탑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선이 확정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후 2005년 8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송전탑 건설 추진이 주민들에게 처음 알려졌다. 2005년 12월 5일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팽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으로 몰려가 '데모'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두 분의 어르신이 목숨을 끊으셨다. 공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끌어안고 포크레인에 목줄을 걸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전기가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밀양과 손잡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연대시민들이 있었다. 13차례 공사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지만, 결국 어마어마한 공권력과 돈의 힘으로 송전탑은 완공되었다. 그러나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이 지금도 한전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송전탑을 뽑아낼 때까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꿀 때까지 밀양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10년을 맞아 10년 투쟁의 기록을 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사진기록집 '밀양, 10년의 빛'을 발간했다. 10년, 그리고 다시 1일, 2일, 3일……. 송전탑을 뽑아내고, 핵발전소를 없애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2015년 6월에 열린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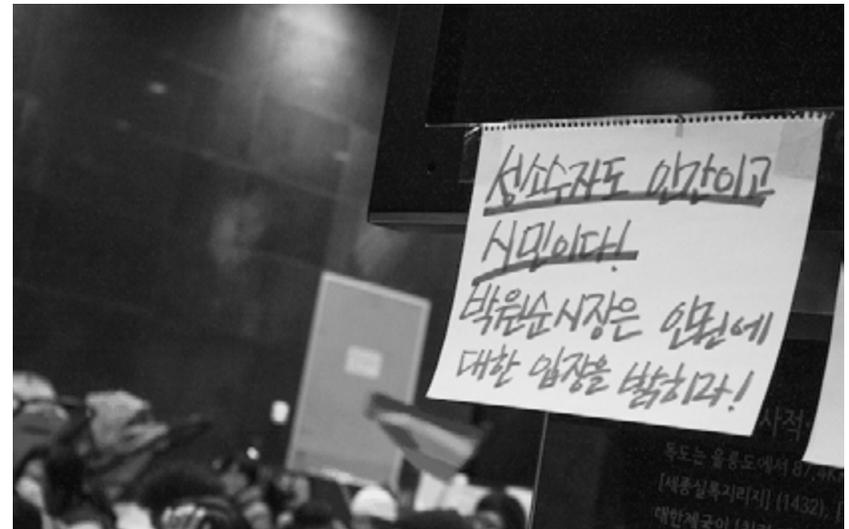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2015.12.6.

2015년 12월 6일은 서울시청에서 벌였던 무지개농성 1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의 성소수자 혐오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인권 행보에 분노하며 성소수자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2014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였다.

농성기간 동안 인권/시민/사회/정당/노동/장애/여성/환경/이주 등 각계각층에서 연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농성 참여자들은 그림자 시위, 면담요청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를 압박했다.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농성단과의 면담을 통해 "여러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표현을 요구하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12월 11일 농성을 마무리하며 이후의 활동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위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선포되지 않았다.

무지개 농성에 함께 했던 이들이 목소리 높였던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외침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함께 맞서야겠다는 울림으로 퍼졌다. 무지개농성단의 활동은 4회 이돈명 인권상과 3.8세계여성의날 기념 31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투쟁이 이어지고, 기억이 만나는 공간 '비정규노동자의 집'

2015.12.12.

7월에 열린 '기륭전자분회 투쟁 10년 평가토론회'는 10년의 싸움이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였다. 2006년 누군가 말했던 '질 수도, 저서도 안 되는 투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박근혜 노동법을 막아내는 사회적 운동으로 이어가는 것과 함께 비정규노동자의 집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옮겨갔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서 연대의 고리 노릇을 했던 기륭 투쟁의 역사, 오늘도 계속되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거점이자, 상경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쉼터이며, 연대와 소통의 공간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집'을 만들고자 한다. 10년의 세월은 기륭만의 세월이 아닌, 수많은 비정규당사자들의 투쟁과 눈물의 세월이었다. 재판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지만 잘 곳이 없어 회의실 맨바닥에 몸을 누였던 이들, 상경투쟁을 올라왔지만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해야 했던 이들, 앞이 보이지 않는 투쟁이 답답하지만 어디에서도 속편하게 이야기 못하는 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은 10년 간 싸웠던 비정규노동자들의 바람이었다.

그렇게 동희오토, 한국GM, 현대차 비정규직, 기아차 비정규직, 이랜드, 코스콤 등 비정규당사자들의 제안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000개의 주춧돌을 모아 서울에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자는 이 프로젝트는 12월 12일 추진위원회 총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것이다. 10년의 싸움은 이렇게 이어지고, 또 다른 비정규운동과 연결된다.

함께 만드는비정규노동자의 집

이랜드, KTX, 동희오토, 지엠대우,
하이스코, 기륭전자, 하이닉스...
무수한 역사가 밀고 온 미래지만 우리는 아직
고통 속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되새기고 응집하여
작지만 단단한 미래를 만들고자
비정규노동자의 집을 준비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집은 이런 공간입니다

-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 비정규단체, 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공간
- 비정규현장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 공간
- 비정규운동과 문화운동이 만나는 공간

비정규노동자의 집 추진경과

- 2014년 말 기륭공대위에서 논의 시작
- 2015. 7. 17 기륭 10년 투쟁 평가와 아울러
《비정규노동자의 집》 공식 제안
- 2015. 7. 24 초기제안자 구성 및 제안자 모집
- 2015. 8. 12 제안자들의 사회적 제안으로
주춧돌, CMS 회원 모집 시작
- 2015년 8월 제안자 모임(8월 중, 추후공지)
- 2015년 11월 주춧돌 모임(시간, 장소 추후공지)
- 2016년 2월 전체회의
- 2016년 3월 공간 확보 및 공간 정비
- 2016년 3월 서울 도심 단독주택(전월세)로 공간 개소



프로젝트 그날들

2015 인권의 날들을 함께 모으는 프로젝트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강경알이,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광주인권운동센터, 금속노조 법률원,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법연석회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 공동캠페인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탈시설실현을위한 공동행동, 성소수차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쌍용차법대위,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 노동권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콜트콜텍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 쿼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제복지원대책위, 홀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황선, 4.16연대,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SOGI법정책연구회

후원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